

공공기관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 그리고

- 구조조정 · 복리후생 축소
- 노조 탄압 · 여전한 낙하산 인사

» 관련 기사 4 ~ 5 면



우크라이나 위기

서방도 러시아도 아닌
국제사회주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을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으로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10~12면

경제 혁신 37개년 계획 비판

박근혜식
고통 전가 계획

3면



노조 탄압에 맞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20면

철도 민영화에
맞선 투쟁 / 의사 파업

5~7면

3·22
파시즘,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3면

전진하는
청소 노동자 투쟁

14~15면

북한 개혁·개방의
지정학

19면

누구의 말일까요?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압령어리로 생각하고 결핍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박근혜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 주고 대통령, 국회의원 당선됐죠.”

김무성의 천기누설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대학에도 1조 원을 기부했고 뉴욕시장 하면서 개인비용 7천억 원을 썼다. 여건이 허락하면 제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

현대중공업 주식만 1조 9천억 원 보유한 새누리당 정몽준의 ‘여유’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박승호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서류 하나가 조작됐다는 것 아니냐.”

국정원 출신다운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

“절대로 종북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새로 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안철수가 밝힌 제33대 통합 신당 추진 합의 이유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민중 중심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의 DNA가 비슷하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변론에서 법무부 측 참고인 유동열, CSI 과학수사 저리 가라군

“모범생 안철수 폭탄주까지…”

MBC<뉴스24>
안철수가 폭탄주 돌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하는 만큼 집에서 하면 윤이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경비도 집에선 문 열어놓고 살아도 학교에선 눈 부릅뜨고 지킨다. 총장님은 이일이 그렇게 얼마 안 줘도 되는 일로 보이냐. 총장님, 교수님은 떨어진 휴지 하나 줍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더 못 주겠다는 건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의 분노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공급입니다.”

동반자살한 세 모녀의 마지막 편지,
이 봉투에는 7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김현옥 전교조 교사, 역사교사모임 회원

교육부는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7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2월 22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렇게 결의했다. “국정교과서화나 교육부의 편수 기능 강화 등이 구체화되면, 기존의 역사교과서 네트워크를 국정교과서 저지 투쟁본부로 전환해 연가투쟁을 포함하는 강력한 투쟁[을 한다.]”

정부와 우익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한국사 교과서들이 모두 좌편향이므로 국가가 공인하는 ‘객관적인’ 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7년부터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화하며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한국사 교과서 혼란’으로 여론화해 수능에서 정답 논란이 없도록 국정제가 필요하다고 선전한다. 입시를 눈앞에 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



노동자연대

게급 분단 사회에서 가치 중립적 교육은 없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싶다.

기고 있다. 게다가 마치 국정제가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가치중립?

그러나 국정제가 학습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말은 거짓이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학습에 시달린다. 실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격정이라면 국정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고교서열체제와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객관적인’ 역사라는 말도 어처구니없다. 국가편찬위원회와 교육부의 후원 속에 검정과정을 통과한 뉴라이트 경향의 교학사 교과서에서 보듯이 가치중립적인 역사는 엄밀히 말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제는 일제 군국주의와 유신체제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책에 동원돼 흑사당하는 공무원 노동자

권정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으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살아 있는 닭, 오리 수십만 마리를 땅에 파묻거나 일일이 자루에 넣는 등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감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빠진다.

살아 있는 동물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환청과 악몽에 시달린다. 숙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피

폐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제대로 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AI 발생 지역의 공무원들은 본래 담당업무를 넘어서 살처분, 방역조소, 상환실 근무, 당직근무 등을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과로와 뇌출혈로 쓰러지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1년 구제역 당시에도 9명이 사망하고, 1백52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대책은 고작해야 살처분에 동원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타미플루를 투약하는 것뿐이다.

기가 막힌 것은 타미플루는 투약 후 2주가 지나야 면역항체가 만들어져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작업 중에 노동자가 감염이 되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뒷집

이러한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은 혼신을 다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뒷집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시간제 공무원원을 확대해서 공무원 노동자들 전반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안 그래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공무원 수가 가장 적는데, 비정규직만 늘린다면 재해 대응 능력은 더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

오직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건설할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거리와 대학에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3월 31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오아시스빌딩 앞) 19:30~20:3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12:00~13:00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앞 12:00~13:0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4월 1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8:30~19:3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19:00~20:00
고려대 정경대 후문 16:30~17: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입구 12:00~13:0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4월 2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12:00~13:00
부산대(부산) 정문 17:30~18:30

격주 목요일 (다음호 가판은 4월 3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증부소방서 옆 19:00~20:00
인하대 학생회관 앞 12:30~13:30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17:30~18:30

격주 금요일 (다음호 가판은 4월 4일)

인천대 컨벤션센터 1층 12:30~13:30

노동자 연대 안드로이드 앱

새 온라인 기사와 신문이 나오면 알려 드립니다.
최신 기사를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oo.gl/evF3xg>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2014년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한 심화되는 정부의 인종차별 규탄 및 인종차별 반대 국제행동 연대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20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 아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3월 22일 (토) 오후 2시 | 서울시청 광장
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이윤보다 생명이다! 국민건강 팔아먹는 의료 민영화 절대 안 돼
국민총불
3월 22일 (토) 오후 6시 | 서울 청계광장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법 제도 개선 쟁취 투쟁 승리 결의대회
3월 29일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
주최 : 화물연대

서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용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 포럼에 초대합니다

노동자연대 서울 남부지구
비정상적 정상화, 노동자들은 왜 공공 '개혁'에 저항하는가?

연사 : 강동훈(〈노동자 연대〉기자), 이호성(한전kdn 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 3월 20일 (목) 저녁 7시30분
장소 : 공간더하기(강남역 12번 출구)
참가비 : 일반 4,000원/ 학생 3,000원
문의 : 010-2716-5662

노동자연대 서울 중북부지구
친서방이냐? 친러시아냐?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우크라이나의 위기와 제국주의 갈등

연사 : 차승일(〈노동자 연대〉기자)
일시 : 3월 2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6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000원(청소년 1,000원)
문의 : 010-9820-5698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연사 : 안외택(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일시 : 3월 25일 (화) 오후 7시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000원 (학생 할인 2,000원)
문의 : 010-5004-1880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연사 : 윤영규(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
일시 : 3월 25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면 모임공간 더모임
참가비 : 4,000원(학생 3,000원)
문의 : 010-2008-0588

노동자연대 인천지회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으로부터 듣는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연사 : 유숙경(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
일시 : 3월 28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인천본부 1층 교육장
참가비 : 2,000원(학생, 청소년 1,000원)
문의 : 010-7152-3017

주최 | 노동자연대
(<http://workersolidarity.org>)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2월 25일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정으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 안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발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월 20일쯤에 ‘15대 중점 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재부의 안을 무시하고 2월 25일에 자신이 직접 손본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부랴부랴 새로운 계획을 보도자료로 내놓았다.

이처럼 계획을 급조하다 보니 혼란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는 월세 부담을 줄여 준다면 ‘월세 세액공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따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주일 만에 집주인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보완책을 내놓아야만 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 이념인 ‘창조경제’는 여전히 실체를 알 수 없어서 3개년 계획에 실린 창조경제 방안들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등과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정부 지원으로 기업들을 후원하는 이런 정책은 거품을 만들어 오히려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노동유연화

이런 혼란과 말잔치는 분명 박근혜 정부의 위신과 정책 집행력을 깎아먹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직접 고른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박근혜는 3개년 계획을 통해 이전까지 내놓았던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 같은 입발림 소리조차 내팽개치고,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같은 친기업 · 친부유층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첫째, 3개년 계획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즉, 과도한 부채를 빌미로 공공부



박근혜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대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는 일은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는 기재부 계획에는 없던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개악안을 3개년 계획에 직접 포함시켰다. 이는 공공부문 부채를 축소하고 국민연금 · 기초연금 개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게다가 3월 5일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에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동조합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기업 경영 유연성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시 말해, 단협 개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했듯이 민간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입단협 교섭 지침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 정상화’가 공공부문 구조조정만 노린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 공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라는 〈노동자 연대〉(레프트21) 신문의 지적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둘째, 3개년 계획에는 “파견업 범

위 · 기간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안과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법 도입,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 같은 비정규직 확대 정책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서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 확대” 방안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방안을 포함시키고, 정년을 연장한다면서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을 포함시키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준다면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의 단계적 축소 등 제재 강화”를 포함시켜,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처럼 3개년 계획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공격하는 대대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이다.

셋째, 3개년 계획은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다.

박근혜는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한다며 공기업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을 언급하며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공기업 분할과 자회사 신설’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서발 KTX와 같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사례를 향한 등 다른 공공부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민영화와 규제 완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전기 · 가스 · 우편 · 수도 같은 다른 공공부문에도 적용해, 돈이 되는 알짜배기 부분을 분리하고, 훗날 이 자회사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한다며 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이 여덟 군데나 있으므로 이는 한국의 의료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영화 · 규제완화를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

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서 일제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3개년 계획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 정책이다.

박근혜는 “처부술 원수,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규제를 확확 들어내야” 한다거나 “규제 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며, 연일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규제총량제”와 “자동효력 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대기업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11조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조바심

이처럼 박근혜의 3개년 계획은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민영화와 정부 지원으로 수익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하려는 정책이다.

물론 그 대가는 노동자들이 지게 된다. 경제 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을 더한층 쥐어짜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신흥국의 위기와 중국 경기의 둔화 등을 보면서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이 과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난 연말에 벌어진 철도 파업은 박근혜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노동자들에게 줬고, 불통 강성 정부를 진정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민영화 반대 분위기에 힘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한국노총과 그 외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박근혜에 맞선 저항의 선두에서 강력히 투쟁하면 지난 연말에 그랬듯이 학생, 청년,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저항의 초점을 제공하고 광범한 사회적 연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3월 22일은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본지가 지난 호(〈레프트21〉 121호)에 보도한 것처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3월 22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여러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날 행동은 그리스의 파시즘 반대 공동전선인 ‘인종차별 · 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이 제안했다. KEERFA는 그리스의 황금새벽당이나 헝가리의 조빅당 같은 노골적인 신나치 정당,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나 영국국민당(BNP) 같은 우파파시즘 정당, 네덜란드 자유당 같은 인종차별적 극우 포퓰리즘 정당 등 인종차별 · 파시즘 정당이 유럽 곳곳에서 성장하는 데에 맞서고자 이번 국제 공동 행동을 발의했다.

KEERFA는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스트가 부상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도 이번 행동을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KEERFA는 집중 집회가 열릴 아테네를 비롯해 주요 도시 11곳과 그리스 전역의 작업장, 학교, 거리에서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지역 KEERFA 연대체들도 각지에서 이주민 단체들이 이날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공무원노조연맹(ADEDY)



그리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파시즘 시위.

과 함께 병원 노동자들과 교사 노동자들도 22일 행동에 참가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사들은 자기 학교 학생회들의 호소에 응해 이주민 단체들과의 연대를 건설하고 있다.

KEERFA를 주도하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은 이런 행동에 적극 나서며 노동조합과 이주민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주

민 박해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남아시아, 동유럽, 카리브 해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해 왔다. 오늘날 이 이주민들은 유럽 노동계급의 중요한 일부이며, 적지 않은 수가 노동조합원이기도 하다.

유럽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와 긴축으로 말미암은 주택 부족, 실업, 저임금, 복지 삭감의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차별받는 이주민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일 뿐 아니라 조직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또한 이주민 차별이 만연한 분위기는 파시즘이 자라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인종차별과 이주민 박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조직 노동계급

영국에서는 반파시즘연합(UAF)을 중심으로 대도시 세 곳에서 집회가 조직되고 있다. 영국노총(TUC)이 UAF와 함께 이날 행동을 주최하고 주요 노조들이 후원하고 나선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 힘입어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열명이 글래스고(스코틀랜드)에서 열릴 집회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UAF는 BNP 대표 닉 그리핀을 5월에 치러질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2013년 말부터 건설해 왔다. UAF는 닉 그리핀 낙선 운동과 3 · 22 국제 공동 행동을 결합시키려 한다.

이런 운동들에서 UAF를 주도하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SWP는 지난 선거에서 보수당 표를 가져오며 성장세를 보인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독립당(Ukip)에 반대하는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반자본주의신당(NPA) 등 좌파들이 23일에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22일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유로파시즘 정당인 민주당 당원들이 국제 여성의 날 집회 참가자 네 명을 칼부림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나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날 공동 행동은 그리스, 영국, 프랑스 외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폴란드 바르샤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미국 뉴욕 등 전세계 17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국제 공동 행동의 날에 연대를 나타내고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3월 20일에 열린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행동을 꾸준히 전개한 단체들에 노동자연대가 제안한 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가 포함된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관련기사 13면)

김준호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부터 본보기로 공격해 노동계급 전체로 고통전가를 확대하려는 계획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도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공공부문 공격을 추진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인력감축, 공공기관 노동자 실질 임금 삭감,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격 등을 했다. 그러나 민영화를 대거 밀어붙이진 못했고, 2009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4대강 사업 같은 돈 풀기를 해야 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 등 전임 정부가 미처 다하지 못한 공격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정통 우파답게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 한다. 공공기관을 동원한 돈 풀기를 자제하고 오히려 긴축 방향에 서겠다는 것이다.

덕분에 박근혜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해외 친기업 경제지들과 투자은행들의 칭찬을 받았다. "대규모 통화부양책에 앞서 구조 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서 아베노믹스와도 대조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긴축이 경제를 살린 일은 근래 없다.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경기부양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현재로서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부채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이 매우 집요하고 공세적일 것임을 뜻한다.

'정상화'의 본질

정부는 각 공공기관들이 1월 말에 제출한 계획을 검토한 후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미 각 기관들이 낸 계획 자체가 지난해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다 40조 원가량이나 더 줄이는 방안이었는데도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의 계획이 부족하다며 '되짜'를 냈다.

위선적이게도, 노동자들에게는 "뼈를 깎는 각오"를 하라면서, 정작 '낙하산' 기관장 방직책은 빼졌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펴낸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보면, 이미 공공기관에 포진한 친박 인사가 1백14명이나 된다.

정부가 확정한 '정상화' 실행 계획을 보면 그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상화'는 민영화 확대 정책이다.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 체제 도입"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만 봐도 박근혜가 철도 분할 민영화 모델을 확대할 작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채 감축의 주된 방식으로 제시된 '사업 조정'의 주요 내용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 가령, 발전 공기업들은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 민간 자본 확대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는 결과



공공부문 공격에 공동대응을 시작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를 낳을 것이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매각 등 '자산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로 직결될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이다. 부채를 줄이라는 정부의 압박 속에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은 임대주택, 풍력발전, 도로 등의 건설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계획을 내놨다.

셋째,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이번 '정상화' 계획안에 전기·도로·철도·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일단 요금 인상 계획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앞으로라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다. 부채를 줄이라는 정부의 엄청난 압박 자체가 지속적인 요금 인상의 유혹을 낳을 것이다.

재벌 특혜 의혹도 있다. 공공기관 부지나 사업들이 한꺼번에 매각 대상이 되면, 재벌들만 알짜 공공재산을 헐값에 가져가는 특혜를 누릴 것이다.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 매각도 삼성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다.

지금 정부가 가장 호들갑 떨며 비난하는 것은 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다.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려고 단체협약을 개악하려 하고, 이에 따르는 저항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 시 노동조합의 동의권 같은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공격하려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엄청난 특혜를 누려서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빛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는 모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빗더미 인천공항철도 인수, 보급차량 주택 건설, 해외 자원 개발, 부실 저축은행 정리 등이 바로 부채 급증의 핵심 이유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번에 "과도"하다고 지적된 복리후생비를 다 모아 봤자 1천6백억 원가량으로, 중점관리기관의 총 부채 4백11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약 0.036퍼센트밖에 안 된다.

사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계속 삭감됐다. 정부가 '정상화' 대책의 본보기로 여기는 철도공사의 경우, 이미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가 많이 삭감돼 이번 '정상화' 계획에서는 겨우 1인당 2만 원밖에 깎을 게 없는 지경이었다. '방만경영기관'으로 선정된 가스기술공사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 복리후생비로 보전받아야 했을 뿐이다. 기재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줄이라'고 말하지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일반직 공무원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은 공무원 평균보다 낮게 받고 있다(공공운수노조·연맹 자료).

이간질과 각개 격파에 잘 맞서야

설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무원이나 민간 부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복리후생 혜택을 누린다 해도 이것이 비난받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정부가 말하는 '8대 방만경영'의 사례에는 유급 휴직, 보육·교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처럼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다음 세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보전에 주는 제도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육아로 인한 여성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권장돼야 할 제도다. 육아휴직급여를 공격하는 것은 박근혜가 말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입발림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는 초·중·고 자녀 학비 전액 지원이나 일부 기관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도 문제 삼지만, 이것도 없

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순직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도 유가족의 막대한 생계를 고려한다면 마땅한 것이고,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금 가산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필요한 것이다.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서로 더 낮은 기준으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잘 방어해야,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박근혜가 민간부문 단협까지 공격하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 공격의 칼 끝은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 등 경제위기 고통전가가 벌어진 수많은 나라들의 사례들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우선 공격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는 지렛대가 돼 왔다.

그리고 '정상화' 대책이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후퇴를 포함한 정책이므로, 이것을 막는 것이 노동계급 전체에게 이익이기도 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 자신의 작업장 투쟁이다. 따라서 일각에서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반대를 '이기주의적'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의 각개격파 시도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빈 강통이 되자, 국회 노사정 소위를 노사정위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어 한국노총을 붙잡

아 두려 하는 등 각개격파 시도를 하려 한다. 또, 정상화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 점수로 매겨, 실적이 좋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저항하는 곳은 성과급을 제한하고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이간책을 내놨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공공부문 공격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정상화' 대책의 수단으로 전락한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교섭을 양대노총 공대위에 위임하고 개별 협상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월 27일 열린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대회는 공공기관 중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대부분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3월 22일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때마침 최근 정부의 무리한 '정상화' 계획 추진 때문에 올해 선임한 경영평가단 일부가 줄줄이 사퇴하는 유례 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정부가 평가단원들에게 기존 평가지표 외에 '8대 방만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라고 압박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점검반'의 의견까지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무리수를 두자, 평가팀장 한 명과 팀원들이 '이번 경영평가 목적이 노조 때리기냐'고 항의하며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무리수가 낳은 이런 균열을 활용하고, 22일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올해 벌어질 공공부문 공격에 맞선 투쟁에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미진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3월 22일(토) 오후 2시 | 서울 시청 광장

주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4~29일 6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았던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대자본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특히 그렇다.

복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만성질환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매달 병원을 찾아가 약을 처방받는 일은 간단히 무시해 버릴 만한 불편함이 아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왕진이나 야간진료 등을 도입할 것이다. 정부 투자를 늘려 공공의료를 확대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 질환 전액 보장’조차 폐기한 마당에 이런 정책은 고려 대상조차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상 전화로 이를 대신하라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긴 용역 보고서에서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돼 있다. 또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의료 사고를 낳을 위험이 있고, 각종 장비 구입비와 관리료 등 의료비를 높이기만 할 것이다. 원격의료로 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삼성, SK, GS 등 대기업들이다.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신약·신의료기술 심사 완화 등을 추진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뻔뻔하게도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 병원이니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 추구는 영리 병원 설립과 똑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사실상 자회사가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가 삼성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고리 구실을 하는 것을 보라. 이는 의료비 폭등과 노동자 구조조정,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 간 수익성 경쟁을 격화시켜 이 과정을 촉진할 것이다. 또,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병원을 사고팔도록 허용해 자본의 배만 불릴 것이다.

신약과 신의료기술 심사 완화는 사실상 환자들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진료가 늘면 환자들이 내야 하는 의료비도 크게 늘 것이다.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만이 문제가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었고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민영화 계획이 나오는데도 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하는 보건복지부의 광고가 진실이라면 당장 지방의료원 매각 계획부터 막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

전공의

의사들의 이번 파업에는 특히 전공의들이 동참한 것이 큰 효과를 냈다. 10일에는 불참한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레지던트)들도 24일부터는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파업이 대형 종합병원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박근혜 정부는 한발 물러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에 상정하지 않았다.

소속 병원의 이윤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요구받으며 혹독한 노동강도와 규율을 강요받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다른 병원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노동조건은 의료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며칠 밤을 새우고 더러운 가운을 입은 의사에게 친절은커녕 기본적인 위생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의 ‘특권’을 미끼로 강요되는 상명하달식 교육 체계는 청년 의사들이 다른 병원 노동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비록 4~5년을 병원에 머물다 떠나는 한시적인 조건일지라도 전공의들의 노동 조건은 다른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전공의들에게 법대로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려면 의료 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충원돼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내내 제기해 온 핵심 요구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병원 경영진과 정부에 맞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싸우기를 바란다.

예전과 달리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많은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의사들이 더욱 병원의 이윤을 쫓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에 맞선 의사들의 파업은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결정적 힘

다만, 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 중 일부는 노동계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수가 인상 요구는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낮고 정부의 규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그 부담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의사협회가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를 요구해 왔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 파업을 혼란스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이처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요구와 정부 규제에 반대하고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요구가 공존하는 것은 의사들이 단일한 계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한 다. 의사들 중 일부는 노동계급에 속하지만 일부는 중간계급에 속하고 소수는 자본가 계급에 속한다.

정부는 이런 이해관계 차이를 이용해 의사들의 일부를 달래고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의사 파업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노동계급만이 의료 민영화에 일관되게 반대해 싸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은 의료 민영화로 득을 볼 수 없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민영화에 맞선 6월 파업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광범한 대중의 이익을 대변해 투쟁에 나선으로써 더 광범한 지지를 결집시키는 투쟁의 구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은 의사파업에서 확인된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에 부응해 결정적 힘을 보여 줄 준비를 해야 한다.

장호중

이 기사는 3월 12일에 온라인에 게재된 ‘박근혜 정부가 의사 파업에 책임있다’의 개정증보판이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서울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 발표

박원순식 비정상의 정상화?

3월 5일 서울시는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보고회를 열었다.

컨설팅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 서울시 산하 5개 기관이다.

이번 컨설팅 결과는 한마디로 “돈 벌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가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컨설팅을 의뢰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맥킨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M&A와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해고 등을 조언해 주고 때돈을 벌여 온 글로벌 기업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던 ‘회계의 삼성’이다. 서울시는 이번 컨설팅 비용으로만 무려 30억 원이나 쏟아부었다.

보고서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수익성과 인력 효율화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보고서는 서울지하철 양 공사 역사에 유명 브랜드 점포 유치, 광고주 다각화, 지하 아케이드 개발, 심지어는 지하철 역 이름을 돈 받고 파는 방안 등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유치하라고 권고한다.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은 유명 통신업체인 보다폰사에 3년간 약 46억 원을 받고 ‘솔 광장’역을 ‘보다폰-솔역’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삼성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역 이름이 ‘삼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강요하는 보고서 결과에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강남’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며,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 무인운전 도입, 업무의주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하철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력 감축,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도 서울지하철 양 공사의 노동자들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무인운전 도입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이미 서울도시철도의 1인승무는 잇따른 기관사들의 자살을 불러와,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조차 2인승무로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다”며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유

감이다.

박원순 시장의 이런 언급은 지난해 10월 말 맥킨지의 중간 용역 보고 내용과 관련해 “노사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도 위배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혁주의 정치인 박원순 시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정상화’를 강행하려는 것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저항에 나서고 있다. 이런 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산하 기관들에 비용 감축·수익성 확대·노동조건 악화 등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강요하는 것은 박근혜의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힘을 실어 주는 격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해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도시철도노조 등은 이번 보고서 내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윤필언

대규모 정리해고와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최근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됐다.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8월 내놓은 ‘인력통합관리안’이라는 것인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철도공사 직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1천 명을 물류·정비·시설 자회사에 각각 3천 명, 2천 명, 6천 명을 보내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철도공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돼 그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다. 즉,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로 ‘전직(轉籍)’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리해고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격을 감행하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대규모 인력감축은 또한 열차 사고 위험을 키워 대형참사를 부를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 방안이 단지 ‘전직’을 압박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민영화가 노리는 핵심 목표가 바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통신(현 KT) 민영화가 이를 가장 잘 보여 준다. 한국통신은 민영화 전 3~4년 동안 전체 인력의 약 22퍼센트인 1만 3천여 명을 감축했다. 민영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2011년에는 민영화 전 인력 규모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검토 방안의 하나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발뻠하지만, 이 말을 도무지 믿기 어렵다. 그동안에도 공항철도 민영화, 적자선 매각 계획이 폭로될 때마다 국토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 계획들은 결국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의 계획대로 하자면 화물 분리는 당장 올해 추진할 과제다. 또, 2016년 1월에 예정대로 수서 KTX를 개통하려면, 기존 철도공사 KTX 기장들을 파견하거나 전직시키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미 철도공사가 KTX 기장들에게 수서 KTX ‘시범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물론 여전히 강력한 철도노조를 상대로 정부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노동자들의 저항 수준에 달려 있다.

수서 KTX가 분할 민영화의 출발이었다면 화물 분리는 본격적인 분할 민영화다.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이 “화물 분리는 노조의 명운을 걸고 전면파업이라도 벌여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민영화 저지 2라운드 전투에서 판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와 철도공사가 본격적인 공격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분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작되는 대규모 전환배치와 인력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잘 벌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정원



전대민

“분할 민영화는 노조의 명운을 걸고 전면 파업이라도 벌여 반드시 막아야 한다.” 2월 24일 서울역 철도파업 전야제

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두 지부장이 연대를 호소하며 투쟁의 방향에 대해 말한다. 서울차량지부는 한 달 가까이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청량리 기관차승무지부는 중앙선 1인승무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이 내용은 3월 14일 ‘일방적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및 노조 탄압 분쇄’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하현아, 박세중 지부장의 발언을 녹취한 것이다.

녹취 정리 배수현·정선영



하현아



박세중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사측은 차량검수원 9명과 청량리 기관차 조합원 2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것입니다.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직위해제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지부장은 주둥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로 하는 것이다. 나는 지부장과 노선이 같아. 언제나 따라갈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

과 함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색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투쟁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서울차량 조합원 동지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1백여 명씩 관리자들과 서부경찰서장 젊은 놈이 나와서 ‘애들 몇 명 없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간 다음에 선로 밑까지 치고 내려와서 저희를 유린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만 당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그리고 연대 오신 조합원들과 지역의 동지들이 정말 하루 하루 감동의 드라마도 쓰고 계십니다. 직위해제를 협박하고 ‘너희들의 업무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소장의 명령을 다 거부하고, 한 과 전체가 일하다 말고 달려와서 14~15명씩 전부 다 직위해제를 각오하고 검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이신 동지들을 보며 이 투쟁이 서울지방본부의 투쟁으로, 또 전국의 투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철도노조를 죽이려고 철도공사가 강제전보 등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시작될 전국의 투쟁과 힘을 모아서 조합원들을 지키는 서울차량지부가 되겠습니다.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각 지부의 현안을 드러내 놓고 싸워 투쟁을 확대합시다”

서울차량지부장과 조합원 동지들 존경스럽습니다. 1개 지부가 공권력과 철도공사와 맞서 싸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싸움은 철도공사를 둘러싼 정세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정부는 극단적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라는 정부의 신호에 맞춰 철도공사는 이런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대강대강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수색별의 피 터지는 싸움이 곧 각 지부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싸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현장

에 와서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각 현장에서 지금 안고 있는 사안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 놓고, 지금부터 현장을 준비하고 조직해서 싸움을 확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 투쟁

물류자회사 곧 가시화될 겁니다. 여기 있는 청량리기관차지부는 1인승무를 진행하면서 [여객 담당과] 화물·물류 담당 기관사들이 명백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3천7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곧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로 파견되거나 아니면 국토부가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강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안들을 드러내 놓고 싸우면서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차량에서 벌이고 있는 현장 투쟁처럼 각 현장에서 자신의 투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량리기관차지부도 투쟁이 끝나지 않았습다.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저희도 분발해서 현장에서 싸워 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되고 있는 관리자들의 폭력을 분산시키고, 공통의 현안인 강제전출, 물류자회사가 현실화된다면 확대쟁대위에서 결의했던 대로 일손을 놓는 것만이 승리

하는 길입니다.

아마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 왔던 철도 인생을 어떻게든 정리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명예롭게 정리할 것이냐, 강제로 해고될 것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겁니다.

저는 힘차게 투쟁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곳곳하게 싸우고 계신 서울차량지부 승리할 수 있도록 앞에서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을 가지고 싸우면서 공동의 현안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세중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

닥쳐온 강제전보와 현장 구조조정에 지금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3월 12일 강제전보 시행지침이 철도 공사 지역본부로 내려왔다. 노조는 3월 말 강제전보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킨 후 분할 민영화에 속도를 낼 목적으로 대규모 강제전보를 밀어붙이려 한다. 박근혜는 취임 1년 연설에서도 철도 민영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철도공사는 올해 예정된 물류 분할 등 분할 민영화 추진을 위해 '방만 경영 정상화'와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박근혜는 신중국 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해 긴축과 구조조정,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강제전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측이 강제전보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인사권을 이용해 노동자들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강제 전보를 시행하지 못했다.

사측은 강제전보라는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시켜 분열을 촉진하려 하고 이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사측에 맞설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 이것이 관철되면 결국 노조 조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감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에게는 여전히 조직력이 건재한 철도노조야말로 민영화 추진을 위해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강제전보에 대한 우려가 몹시 컸다. 3월 12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정대위와 수련회에서는 여러 지부장과 현장 간부들이 입을 모아 강제 전보에 대해 지부별 대처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대우 계획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 교육자로 온 이호동 발전노조 전 위원장도 발전노조의 경험을 들어 강제전보에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 전보

이미 사측이 조만간 강제전보를 시행할 것은 예상됐다. 이 때문에 구로차량지부는 2월 25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강제전보 명단이 나온 뒤에 투쟁을 시작하면 너무 늦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올바른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차량 지부들도 3월 17일부터 강제전보에 맞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제 강제 전보 강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 강제전보 반대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사측은 이미 명단을 확정된 채 발표만 남긴 상황이다. 사측이 행동을 개시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는 우리 편에 전혀 이롭지 않다. 많은 노동자들이 경험을 통해 강제전보가 시작된 뒤 싸우면 늦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사측이 전직을 원하던 노동자들을 '희망전보'라는 이름으로 강제전보와 함께 추진하며 개별 지부들이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강제전보가 시작되려는 지금은 노조가 희망전보를 원하는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설득해 막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강제전보에 맞서 단결해 싸울 수 있다.

한편 철도공사가 강제전보 시행을 본격화한 시점은 사측과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한 달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때다.



노조를 무력화해서 대량해고와 분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2월 25일 철도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지난 연말 파업 이후 복귀한 노동자들의 사기가 처음에 만만치 않자, 철도공사는 기회를 엿보다 2월 초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곧이어 수도권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해당 지부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사측은 한동안 대규모 강제 전보를 신중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2월 25일 하루 경교 파업 이후 이 투쟁들이 더 확대되지 않자 사측의 공세가 더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인력감축, 일방적인 업무 배치 변경 등의 공격도 다른 지부들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강제전보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현장 노동자들을 제압하려 한다. 1인승무와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과 같은 구조조정은 다른 지부들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 노조 전체의 저항을 받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을 것이다. 게다가 사측은 철도노조 내 가장 대표적인 강성 지부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켜 이후 벌어질 전투에서 기선제압의 효과도 거두길 원한다.

따라서 강제전보 저지와 함께 사측이 노동자 일부분을 갈라치기 하려는 구조조정에도 함께 맞서 단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현장 투쟁들을 염호하고 다

른 지부들로 확대해 사측을 강하게 압박해야 사측의 공세에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철도노조 중앙이 해당 지부들만의 투쟁이 아닌 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적극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본격화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1인승무 시범운행을 저지했음에도 안타깝게 본시행까지 저지하지는 못했다.

서울차량 노동자들은 지부 조합원 전원이 직위 해제를 각오하고 거의 한 달째 매일 사측 관리자들과 맞서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일부 노동자들은 아직 굳건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사이 노조 중앙이 지금 투쟁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열망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특히 3월 6일 확대정대위 때 이 투쟁들을 염호하고 확대할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그런데 지금 현장 투쟁을 벌이기 보다는 화물 분할 민영화 반대와 같은 미래의 본격적 전투에 노조 전체가 힘을 실어 투쟁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각 지부들 간에 존재하는 불균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체가 함께 싸울 수 있는 사안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유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런 투쟁들에서 밀리지 않아야 향후 본격화될 분할 민영화 저지 투쟁에 힘있게 나설 수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는 '주머니 칼'이 아니어서 언제든 지도부가 그 힘을 사용하려 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사측과의 기싸움과 공격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이때, 힘을 모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정치적 상황은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으로 여권에서조차 국정원장 사퇴 압박이 커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투쟁을 전진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네트워크

한편 선진적 지부장들과 현장 투사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쟁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에 중심을 둔 투사들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노조 내 여러 의견그룹들의 연

합이나 동맹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벌어지는 전환배치나 구조조정에 맞서 선진적인 투사들과 투쟁적인 현장 조합원들을 포괄하는 더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 지부와 직종에 속한 노동자들이 포함된 네트워크는 각 지부들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에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을 확대해 가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지난해 파업 기간에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도, 기관사 파업을 실질화하는 데도 결정적 도움이 됐을 것이다.

아울러 현장 투사들의 네트워크는 작업장 내 혁명적 세력(조직)이 존재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경험도 함께 봐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해 지배자들의 공격이 일반화되고 한 부문이나 작업장의 투쟁도 서로 양보의 여지가 없을 만큼 치열해 질 때는 부문주의가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 전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연대와 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철도 투사들이 현장 투사들의 네트워크와 동시에 이를 수행할 혁명 조직 건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정원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 투쟁

서울차량지부는 열차 정비원들이 해오던 화물열차 출발 검수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철도공사의 시도를 한 달 가까이 현장에서 저지하고 있다. 이미 화물열차 출발 검수 이관이 노동자들과 열차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오직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또 출발검수 이관은 물류 자회사, 차량정비 자회사로 분할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철도공사는 2월 17일부터 업무를 넘기라고 통보했지만 서울차량의 정비 노동자들은 사측의 징계와 고소·고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출발검수 업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관리자들의 방해 시도를 막으며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고 지역대책위 활동가들도 연일 이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폭력

그런데 2.25 파업 이후 투쟁이 더 확대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측은 탄압의 수위를 높였다. 3월 초부터는 경찰 병력과 사측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철로에 난입해 노동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심수명이 한 노동자를 둘러싸고 폭행해 이 노동자가 119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

졌다. 또 화물열차 정비를 해 온 서울차량지부 노동자 9명을 직위 해제하고 이 투쟁에 연대한 기관사 2명도 직위 해제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 서울차량지부는 총회를 열어 “우리 모두를 직위 해제하라!” 하며 각오를 다지고 앞으로는 더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화물열차 출발 검수 업무를 하기로 했다. 사측이 계속해서 직위 해제를 강행할 경우 즉각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또 “작업장 내로 경찰이 들어온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임시열차 정비를 거부하는 투쟁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후 분할 민영화 등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며 전투적인 지부의 기세를 꺾어 놓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화물열차 출발 검수 이관에 맞선 투쟁은 단지 한 지부의 투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갑게도 3월 12일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확대정대위에서 지역본부와 산하 지부들이 이 투쟁을 적극 염호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 중앙도 이 투쟁을 확대해 향후 분할 자회사를 막아 나가는 투쟁의 주축돌로 만들어야 한다.

정선영

한국지엠 구조조정

양보 교섭은 대안이 아니라 독이다

한국지엠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사측은 최근 군산 공장에서 비정규직 해고, 무급·유급 순환휴직, 전환배치 등을 예고했고, 사무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한국지엠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평의 1·2공장 통합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은 인력감축과 임금 삭감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측은 부평 2공장에서조차 생산량을 줄인다는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내하청 동지들이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군산 공장은 이미 특근도 없고 노는 날도 찾아 임금이 계속 줄었습니다. 휴무 때 건설 현장에 가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지엠은 한국 공장의 물량을 유럽으로 빼고, 신차 출시 계획도, 투자 계획도 내놓지 않아 불안감을 더한층 자극하고 있다. 야비하게도 사측은 노동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파업하면 신차 배정 없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상승해 경쟁력이 없다”고 협박하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을 향한 공격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하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지난 몇 년 사이 공장 폐쇄와 대량해고, 노동자 쥐어짜기로 기력을 회복해 공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간의 침체를 만회하려 지엠·도요타·폭스바겐 같은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2012년을 전후로 다시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격화되는 세계 경쟁

지엠·포드가 호주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기로 한 것, 프랑스의 완성차 업체 1위를 자랑하던 푸조-시트로엥이 전 직원의 10퍼센트인 8천여 명을 해고한 것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2001년 악몽의 재현의 막으려면, 지금부터 고통전가와 이간질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사진은 2월 19일 2001년 정리해고 13년 규탄 집회.

지엠은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8년 파산 직후 미국에서만 공장 13곳을 폐쇄하고 직원 3분의 1을 해고했던 지엠은 이번에도 호주 공장 휴업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엠은 2017년 공장 폐쇄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남아 있는 이들에겐 노동강도를 높이며 고통을 주고 있다. 르노도 2016년까지 프랑스 직원의 14퍼센트인 7천5백 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결코 이런 구조조정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래 세계 자동차 5위 기업으로 도약한 현대·기아차 그룹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나서며, 노동강도를 높이고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통상 임금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에 그토록 진저리를 치는 것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열의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기가 심각한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에선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희망퇴직’과 비정규직 순환 휴직은 어쩌면 시작

에 불과하다. 사측은 군산발 구조조정을 부평으로, 비정규직발 해고를 정규직으로 확대하며 노동자들을 옥죄릴 것이다.

저항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 현장조합원들이 공격에 맞서며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킬 것인지가 결정적인 변수다.

최근 한국지엠 군산지회는 양보 교섭에 합의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번 합의로 ‘2교대 → 1교대 전환’ 시도를 막았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길을 열어주고 정규직의 전보·파전, 전환배치 등도 수용했다.

이런 양보 교섭은 즉각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을 샀는데,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노조가 합의한 “비정규직 순환휴직은 또 다른 형태의 정리해고”라고 규탄했다. 군산 공장 정규직 노동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기는 마찬가지다. 한 노동자는 고용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을 걱정하며 이번 양보가 낄을 파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군산의 합의는 부평이나 사무직 구조조정에도 탄력을 줄 것입니다. 사측은

‘봐라. 군산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물량을 뺄 거다’ 하고 협박하며 우리를 경쟁시킬 것입니다.”

반면교사

이런 ‘바닥을 향한 경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배자들이 즐겨 써먹는 수법이다. 특히 지엠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공장들에서 생산성 경쟁을 시켜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다. ‘경쟁에서 지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용도 없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며 끊임없이 양보와 후퇴를 강요해 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도 그렇듯이, 지엠의 생산 계획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나 노동조건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지엠은 호주에서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고 정부 지원금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단호하게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생산량 조절, 공장의 존폐 여부는 수익성과 시장의 크기, 종합적인 생산 여건 등에 달린 문제다.

그런데도 전미자동차노조는 2007년 이래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지엠의 악랄한 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구실을 했다. 이 노조는 임금 동결, 일정기간 파업 금지, 퇴직자건강보험 삭감 등 대대적인 양보안에 사인했고, 신입 사원에게는 기존 노동자 임금의 절반만 주는 ‘이중임금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전미자동차노조 집행부는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어느 정도라도 지키려면 불가피하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신입 사원들에게 끔찍한 저임금의 고통을 안겨 줬을 뿐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을 가했다.

일단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사측은 몇 년 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노동자 다수를 공장에서 내보냈고, 이제 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엠은 미국 공장에서 체결된 양보 교섭을 손에 쥐고, 다른 나라 공장들에도 저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했다. 또, 지엠과 경쟁하는 포드·크라이슬러 등이 지엠을 따랐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현대·기아차도 처음부터 임금을 낮게 책정했다.

세계적인 경쟁 압력을 받는 기업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전미자동차노조의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 공장의 양보 교섭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해진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번 합의를 이용해 부평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고, 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비정규직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간질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측의 고통전가와 바닥을 향한 경쟁 시도에 맞서 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군산 공장의 양보 교섭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군산·부평·창원 공장의 노동자들이 단결해 임금 삭감과 인력감축 시도 모두에 맞서야 한다.

박설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비정규직 해고 낄을 군산 합의는 철회돼야 합니다”

“군산 공장 정규직지회와 사측이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군산 공장의 JPH(시간당 생산대수)를 낮추면서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비정규직은 순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사항에 종고용 보장 문구가 있고, ‘희망퇴직’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3개월 유급휴직, 6개월 무급 순환휴직을 합의하면서, 9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2009년에 부평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1천여 명이 쫓겨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군산 공장의 합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어렵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군산 공장의 합의가 다른 공장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창원 공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



할 텐데, 이때 사측은 군산 공장의 합의 내용을 들이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싸워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철회돼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단결해 투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하자고 호소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성환

현대차 전주 공장

현장 통제에 맞서 한 달 특근 거부를 결정하다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가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서 3월 한 달 동안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조합원 5백여 명이 전주 공장 본관 앞 항의집회를 두 차례 열기도 했다.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서동환 대의원에 대한 사측의 고소·고발과 징계 해고였다. 서 대의원은 신형차 생산을 위한 라인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이는 사측에 항의했다.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 받을 일이 아니다. 게다가 사측은 징계에 항의하는 천막 농성도 몇 차례나 침탈했다.

전주공장위원회 서성민 기획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측은 한 달 전부터 ‘기초 질서 지키기’로 현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업 실수에 대해서도 징계 협박을 했습니다. 사측은 조기 퇴근 같은 것

도 막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관리자들이 일일이 체크해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함부로 라인을 멈추면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월 12일에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대의원과 노조는 라인을 멈추고 대책 협의를 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고, 사측은 라인을 돌리고 대책 협의를 하자고 해 몸싸움이 있었고 사측의 겁박이 있었습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

“현장 탄압에 맞서야 합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이 쟁취한 권리들을 사측이 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분노하고 있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의 징계와 현장 통제는

전주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울산 공장에서조차 조기 퇴근자들에 대한 감시가 시작됐다. 사측은 지난 1월 울산 1공장 엄길정·박성락 대의원에게 징계 해고를 통보했고, 최근에는 울산 3공장 박상호 조합원도 해고했다. 그는 경비대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두들겨 맞았는데도 도리어 해고됐다. 기아차에서도 안전사고를 둘러싼 라인 정지 전으로 사측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공장위원회가 특근 거부로 현장 통제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현대차 사측이 전 공장에서 현장 통제와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 투쟁을 개별 공장에만 맡겨 뒀선 안 된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전체 노조 차원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허수영



2013년 11월 26일 시간선택제 박람회장 앞에서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항의하는 전교조 교사들.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우선전환 꿈수부터 막아야 한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의 ‘저질’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학교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밀어붙이려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표된 날 곧바로 시행된다. 오는 6월 기존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 신청을 받아 당장 9월부터 학교에 시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려는 수순인 것이다.

‘교원의 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헌법, 법률 등 상위법 준수와 같은 겉치레를 걷어치운 지 오래다. 이미 전교조에 ‘범외노조’ 칼을 들이밀 때도 위헌을 무릅쓰고 시행령을 통해 공격했다.

교육부의 법령 개정 이유는 “육아·간병·학업”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개설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뻔뻔스럽고 역겹기가 짝이 없을 정도다.

교육부의 후안무치한 변명과 달리, 주 2~3일 고용되는 시간제 교사는 안정적 육아·간병·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유로 휴직을 하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과 육아·간병·학업 등 두 가지 일에 허덕이도록 강요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특히, 교직의 다수를 이루는 여성 교원들을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공공 보육시설 확

충 등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채 여성들에게 주된 책임을 떠넘기는 교활한 술책이다. “여성 교원의 경력 단절 없는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정부의 거짓말이 먹히지 않아, 여성 교원의 90퍼센트가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이런 시간제 교사제도가 도입되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육과정이 시간제 교사제도의 불안정한 특성에 맞춰지는 ‘비정상적’ 교육이 일어날 것도 뻔하다. 시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시간제 교원제도가 유발하는 업무 비연속성으로 인해 담임교사 부족, 수업시수 파행, 행정업무 지체, 학교행사 진행 차질과 같은 문제로 교육과정정이 왜곡되고 있다.

시간제 교사제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 전일제 교원에게 집중되면,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해, 학교 교육의 질이 하락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이야기하지만 일주일에 고작 15~25시간만 고용되는 시간제 교사들은 열악한 임금으로 고통받고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 인생을 살아야 한다. 교육부 용역으로 진행된 시간제 교원 관련 연구에서도 열악한 임금 수준을 만회할 대안으로 겸직 허용을 제시해 사실상 ‘투잡’ 인생을 인정한 바 있다. 피자 배달하랴, 수업 준비하랴 힘든 독일 시간제 교사의 ‘투잡’ 고역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 운운하고 ‘질 높은 학생 교육 활동과 상담, 생활지도’를 하라니 뻔뻔함의 도가 지나치다.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원한다는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당장 9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후 남은 빈자리를 ‘정규 교사’로 채울지도 미지수다. 법령 개정안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하고 남은 빈자리에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말쑥한 정규직 일자리를 반토막 내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게 될 공산이 크다.

저질 일자리

다른 한편,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로 전환되었다가 “교육과정 또는 정員관리 운영 등으로 인해 재전환 허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신규임용자의 일부는 원천적으로 전일제 전환이 차단되기도 하고,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

필자가 본지 120호에도 기고했듯이, 정부 측의 온갖 미사여구와 달리 시간제 교사 제도의 본질은 세 가지다. 첫째 ‘저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을 장난치기, 둘째 고용 비용 절감과 고용 유연성 확보, 셋째 공공부문 진축을 위한 공격이다. 이에 덧붙여, 시간제 교사제도는 노동계급의 자녀들을 더욱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내모는 계급 차별적인 것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가 심화돼 물러설 곳이 없는 정부는 현직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유도하고, 신규 교사는 올해

12월 채용 시험을 통해 내년에 배치한다는 꿈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당장 9월에 도입되는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부터 막아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한다면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가 현실이 되려면, 교사들의 광범한 불만을 모아 대규모 단체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강성우파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교사제도를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상황은 아니다. 2013년 11월까지만 해도 당장 올 초부터 시간제 교사 6백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은근슬쩍 내년으로 미뤘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저질’ 일자리와 ‘저질’ 교육환경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대를 의식한 것이다.

철도 및 의료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통상임금 개악, 비정규직 등 여러 부문에서 투쟁 전선이 형성돼 거듭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교사제도에 대한 반발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여론도 우리에게 호의적이다.

교사들이 투쟁의 문을 열어젖히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가 확산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시간제 교사 제도를 막아낼 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범외노조 저지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박태현(전교조 조합원)

3월 25일에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이 전교조의 범외노조 통보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정부의 전교조 범외노조화 공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는 전교조와 다른 노동조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여라도 전교조가 패소하면 정부와 우익은 전교조에 대대적인 공세를 재개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 되면 시간제 교사제 도입, 교원평가 법제화, 연금 개악 등 정부의 교육 공격에 맞선 투쟁도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철도·의료 민영화, 연금,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등 하나같이 노동자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들을 놓고 정부·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대결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때, 전교조의 패소는 노동계급 전체를 당혹케 만들 수 있다.

지나해 정부의 범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압도다수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철도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 판결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그때와는 반대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교조 집행부는 대체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2월 22일 전국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범외노조 관련 계획도 안이하다는 인상을 줬다.

집행부는 설령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CMS 전환으로] 조합 재정이 확보되고 조합원의 이탈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며, “가장 현실적인 사안은 전임자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많은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계획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41명의 대의원들이 연서명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조합원 대중 행동을 배치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집행부는 이 수정안을 수용했다.

진공

집행부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라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다시금 전교조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런 재판부에 대중 집회를 열어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굵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작하다.

그러나 투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법원 판결을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의 적들도 그럴까?

이미 지난해 11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직후 우익 단체들이 ‘미친 판사 전성 시대’라며 재판부를 비난했고, 심지어 판사 집까지 찾아가 성토를 했다. 이들은 4~5월경으로 예정돼 있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시위를 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을까? 승진 문제 등을 비롯해 재판부에 이미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듯 담당 판사가 지난해 11월 가처분신청에서 전교조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법원이 상이한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진공 상태에서 순전히 법리적 측면만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투쟁하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편이 아무런 집단 행동도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보수적 압력에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집행부는 법원 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범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과 광범한 진보 대중에게 전교조의 범외노조 위협 상황을 환기시키고 재판부에 우리의 저항 의지를 보여 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머뭇거리는 서방

알렉스 칼리니코스(원전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람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우크라이나에서 파국은 미뤄진 듯하다. 3월 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기자회견을 열어 크림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장악할 생각은 없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서방의 대응이 별볼일 없으리라는 푸틴의 계산은 옳았다.

3월 6일 유럽연합(이하 EU)은 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는데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나마도 크림자치공화국 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6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유럽의 제재는 훨씬 더 약했을 것이다.

이런 소심한 대응에는 유럽과 러시아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반영돼 있다. 그 관계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메이페어(런던 하이드파크 동쪽에 있는 고급 주택지) 대저택 소유 신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런던의 금융 중심가는 수상쩍은 거래에 관심 있는 자들을 끌어모으는 곳이지만 말이다.

소심

EU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다. EU와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2012년에 2천 8백억 파운드였고, 러시아로 수입된 해외 직접투자(FDI) 중 75퍼센트가 EU 기업들의 것이다. 이에 걸맞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2백40억 파운드밖에 안 돼. 네덜란드와 러시아의 무역 규모보다 작다.

그러나, 지난주에 있었던 회담에서 독 일·이탈리아와 함께 네덜란드가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놀랄 일 이 아니다. 2008년 8월 러시아가 그루지 아(현재의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14년에 영국은 독일의 최대 수출시장이었지만, 양쪽 모두 대립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한 판 불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들이 오바마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는 것도 아니다. 3월 6일 헨리 키신저는 이 논의에 끼어들어 우크라이나를 “핀란드처럼 만들자”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다른 말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EU 쪽으로 더 당기기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하고 나토에 편입시키지는 말자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나토를 러시아 국경 쪽으로 확장시켜 온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나토에 가입한 덕분에 옛 소련 소속이었던 발트해 연안국들(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러시아가 위협하면 미국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월 8일 오바마는 성명을 발표해 “우리 발트해 연안 방위국들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항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해 이 정책을 악화시키려 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러시아 소재 한 싱크탱크의 소장 루슬란 푸코프는 3월 4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푸틴의 의도를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남겨놓으려 애쓸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 정치에 영향을 끼칠 더 강력해진 수단으로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친 러시아 세력에게 보내는 강력한 본보기로서 그럴 것이다.”

본보기

푸코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다음 대통령으로 올라 티모셴코를 밀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록 티모셴코가 지금 은 러시아 반대파의 여결이 돼 있지만, 그녀는 2010년 우크라이나 대선 후보 중 러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였다. 푸코프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또다시 반복된 우크라이나 혁명의 최종 결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사실상 통치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푸틴 씨에게 묶이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치가 다시 격랑에 휘말리기 전까지, 더 약해지고 불안정해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동쪽과 서쪽을 오락가락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2012년 1인당 연간 명목소득이 2천3백29파운드[약 4백 13만 원]였다. 자베이가, 튀니지, 파라과이보다 더 작다. 우크라이나 새 정권은 올리가르히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리가르히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주지사로 임명되고 있다. 티모셴코의 측근인 현재 총리 아르세니 야체뉴크는 이미 재정 지원의 대가로 IMF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그 조건에는 에너지 소비자가격

을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지금 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사람들일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94호 번역 김승일

올리가르히 소련 붕괴 후 시장 자본주의로 전환 할 때 막대한 부와 정치적 권력을 누리게 된 집단

러시아 사회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치키는 훨씬 더 냉소적 어조로 말한다. “우크라이나의 당국자들도 만족해 한다.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핑계로 들며 새 정권을 굳히고,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부 압박의 결과라고 행명하고, 과거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현재 상황이 휘말리기 전까지, 더 약해지고 불안정해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동쪽과 서쪽을 오락가락할 것이다.”

여기서 누가 속죄양이 될지 추측하는

크림반도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 자본주의의 본성인 경쟁과 불안정성이 군사적 위기를 가져온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94호 번역 김승일

이 같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 때문에 단일한 우크라이나 문화를 창출하려 애쓴 중간계급 민족주의 운동은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의 혁명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대중운동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는 제1차세계대전 중 러시아와 독일이 맞붙는 전쟁이 일어나자 차르를 타도했고,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는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러시아 2월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라다’라는 기구가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통할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다.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인 도네츠크에서는 시위대가 6월에 구속된 자칭 “시민 주지사” 파벨 구바레프친 러시아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정부 청사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 2천여 명은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푸틴에게 호소했다.

옛 소련의 “폭창시대”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뱀바당으로 남을지 유럽연합의 품으로 들어갈지를 두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러시아의 구제금융을 바라며 유럽연합과 하던 협상을 막판에 뒤집은 2013년 11월에 터졌는데, 불안정은 정찰기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협력기구 소속 군사감시단이 크림반도로 들어가려다 총격이 발생해 발걸음을 돌린 일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대중운동은 처음에는 올리가르히의 이해관계에 이용됐는데, 이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94호 번역 김승일

이후 1919년에 약탈한 백군 장군 데니킨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데니킨은 주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의 질서는 무너졌다. 네스토르 마호노 같은 아나키스트를 포함해 혁명가들은 저마다 군대를 만들었고 농촌에는 비적들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맛봤을 때

켄 올렌데

“우크라이나”라는 말은 ‘변방’이라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수백 년 동안 열강들이 벌인 전쟁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을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보여 줬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의 내전 기간에 볼셰비키가 우크라이나를 다뤘던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볼셰비키의 지도자 레닌은 제정 러시아를 “여러 인민들을 가둔 감옥”이라고 불렀다. 러시아 제국이 그만큼 다양한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이었다.

차르는 대(大)러시아인 우월주의를 내세웠고, 제국에 속한 다른 민족들이 문명화가 될 때까지 멸시하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억압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제국은 1870년대부터 1905년까지, 그리고 1914년부터 다시 우크라이나어 문화와 신문을 금지했다.

제1차세계대전 개전 전에 레닌은 이렇게 주장했다. “민족 문제에 관한 노동계급 민주주의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어떤 나라도, 어떤 언어도 특권적 지위를 누리서는 절대 안 된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독립국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족들의 정치적 자결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볼셰비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당하는 끔찍한 멸시에 강하게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완전한 평등을 요구한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거의 다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했다. 동부에 사는 농민들은 러시아 지주에게, 서부에 사는 농민들은 폴란드 지주에게 혹사당했고 그래서 그 둘 다 증오의 대상이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하리코프를 비롯한 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대체로 러시아계 이민자이었다.

이 같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 때문에 단일한 우크라이나 문화를 창출하려 애쓴 중간계급 민족주의 운동은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의 혁명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대중운동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는 제1차세계대전 중 러시아와 독일이 맞붙는 전쟁이 일어나자 차르를 타도했고,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는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러시아 2월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라다’라는 기구가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통할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다.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인 도네츠크에서는 시위대가 6월에 구속된 자칭 “시민 주지사” 파벨 구바레프친 러시아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정부 청사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 2천여 명은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푸틴에게 호소했다.

옛 소련의 “폭창시대”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뱀바당으로 남을지 유럽연합의 품으로 들어갈지를 두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러시아의 구제금융을 바라며 유럽연합과 하던 협상을 막판에 뒤집은 2013년 11월에 터졌는데, 불안정은 정찰기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협력기구 소속 군사감시단이 크림반도로 들어가려다 총격이 발생해 발걸음을 돌린 일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대중운동은 처음에는 올리가르히의 이해관계에 이용됐는데, 이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94호 번역 김준호

아 소비에트 정부를 치러 갈 때는 길을 내줬지만 볼셰비키 군대에는 그러지 않았다.

라다가 이런 군사적 책략을 부리는 한 편에서 파업과 시위를 동반한 대중적 사회운동이 일어났다. 하리코프에서 라다와 경쟁하는 소비에트 정부가 생겨났고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의 두 정부[라다와 소비에트]는 전쟁에 돌입했다. 이 전쟁은 빠르게 러시아에서 일어난 내전의 일부가 됐다. 제1차세계대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양쪽의 열강들은 이제 갓 태어난 소비에트 국가를 목 졸라 죽이겠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

처음에 제국주의 군대들은 러시아로 직접 쳐들어왔다. 그러나 이후에는 차르 제국 출신 장군들이 이끄는 ‘백군’을 지원 하는 것을 택했다.

볼셰비키는 페트로그라드를 지키던 적위대(Red Guard)를 적군(Red Army)으로 확대해서 백군에 대응했다.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레온 트로츠키가 적군을 이끌었다.

적군은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적군은 차르 시절의 지주와 지배자들이 복귀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던 노동자, 농민, 소수민족들에게 새 세상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대중 가운데 볼셰비키는 많지 않았지만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에서 급세 효과를 봤다.

라다의 수장 블로디미르 빈니첸코는 투덜거렸다. “우크라이나 주민의 압도 다수는 우리편이 아니다.” 갈수록 많은 세력이 라다를 등지고 볼셰비키로 넘어갔다.

적군이 진격하자 라다는 수도 키예프를 버리고 후퇴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설립을 선포했다.

기층의 지지를 잃은 라다는 권력을 지키려고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군대를 불러들였다. 이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군대를 보냈다. 1918년 3월 초 이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이 새로운 지배자들은 라다를 해산하고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부를 세웠다.

1920년 레닌은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떠한 우월감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닌은 일부 볼셰비키가 “우크라이나어를 2등 언어로 격하시키려고 작위적으로 에스느”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무원이 우크라이나어를 배워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표자를 러시아의 식량 공급 기지로 삼지 말고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셰비키의 정책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다. 차르의 속국이었던 나라 민중의 생활은 1920년대 동안 개선됐다.

볼셰비키는 차르 제국한테 억압당하던 나라들뿐 아니라 아일랜드, 터키, 중국, 인도 등 다른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과거 러시아 제국에 속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러시아어 사용이 강요되지 않았다. 각 나라에서 학교는 자국어를 가르쳤고 정부도 자국어를 사용했다. 어떤 곳에서는 새 국가가 나서서 그동안 제약당하던 언어로 글을 쓰도록 지원했다. 많은 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하나된 외침 – 지주를 노동자 계급 위에 있지 않게 하라” 볼셰비키 시인이자 예술가인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의 1920년 포스터.

나타나 마을 통제권을 놓고 다투었다.

1919년 말 적군은 백군을 몰아냈다. 마침내 평화가 오기가 싶었지만 이번에는 페틀류라가 폴란드에서 군대를 불러들였다. 적군은 폴란드군과 전쟁을 벌였다.

자기 세력권을 넓히려는 또 다른 열강의 침공에 우크라이나 민중은 또다시 희생됐다. 민족주의자들에게 폴란드 지주들에 대한 적개심은 여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페틀류라는 배신자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지역에서 폴란드 군을 쫓아냈지만 1921년 전쟁이 끝날 즈음의 협상 결과로 우크라이나인 4백만 명은 폴란드에 속하게 됐다.

마침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 안정적으로 들어섰다.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여러 라다 정부를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부르주아지에게는 기밀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1920년 레닌은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떠한 우월감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닌은 일부 볼셰비키가 “우크라이나어를 2등 언어로 격하시키려고 작위적으로 에스느”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무원이 우크라이나어를 배워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표자를 러시아의 식량 공급 기지로 삼지 말고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셰비키의 정책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다. 차르의 속국이었던 나라 민중의 생활은 1920년대 동안 개선됐다.

볼셰비키는 차르 제국한테 억압당하던 나라들뿐 아니라 아일랜드, 터키, 중국, 인도 등 다른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과거 러시아 제국에 속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러시아어 사용이 강요되지 않았다. 각 나라에서 학교는 자국어를 가르쳤고 정부도 자국어를 사용했다. 어떤 곳에서는 새 국가가 나서서 그동안 제약당하던 언어로 글을 쓰도록 지원했다. 많은 출



1919년 우크라이나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키예프로 진입하는 적군.

판물이 쏟아져 나왔다.

무슬림

토착민들이 러시아인들보다 우선해서 고용됐다. 각각 소비에트는 대학을 설립 해 비(非)러시아계 지도자를 양성했다.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던 곳은 러시아 동부 무슬림 거주 지역이었다. 러시아의 2월혁명을 보고 무슬림 수백만 명이 급진 언어로 격하시키려고 작위적으로 에스느”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무원이 우크라이나어를 배워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표자를 러시아의 식량 공급 기지로 삼지 말고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셰비키의 정책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다. 차르의 속국이었던 나라 민중의 생활은 1920년대 동안 개선됐다.

볼셰비키는 차르 제국한테 억압당하던 나라들뿐 아니라 아일랜드, 터키, 중국, 인도 등 다른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과거 러시아 제국에 속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러시아어 사용이 강요되지 않았다. 각 나라에서 학교는 자국어를 가르쳤고 정부도 자국어를 사용했다. 어떤 곳에서는 새 국가가 나서서 그동안 제약당하던 언어로 글을 쓰도록 지원했다. 많은 출

우크라이나에 드리워진 제국주의 간 갈등

사이먼 베스케터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면서 세계 지배자들 사이의 연정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됐다. 러시아는 군사적·정치적 책략을 부리며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다자간 논의 기구(우크라이나 새 정부 포함)를 꾸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 자신 동결과 여행 금지 조처가 뒤따를 것이고, 몇 주가 아니라 며칠 안에 그럴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지도적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이 조처에 결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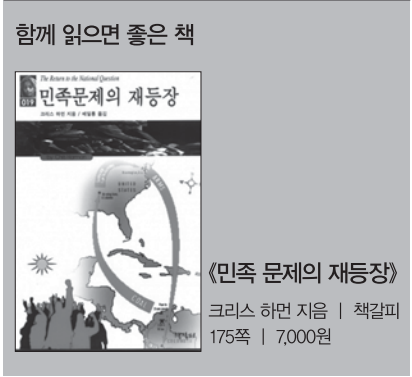
그러나 영국은 결보기와 달리 세계 나 갈 생각은 없다. 영국의 금융 중심가에는

러시아에서 온 자금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여윌돈이 1백만 파운드 이상 있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든 “투자자 비자”를 살 수도 있다. 현재 민사 법정에서 일하는 영국인 변호사들은 일감의 60퍼센트를 러시아·동유럽계 고객들에게서 받는다. 러시아계 기업 50개 이상이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

유럽연합한테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교역국이다.

폭창시대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새 우크라이나 정부가 들어섰다고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서방의 제안은 “쿠데타로 조성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 라고 주장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주시하고 자 영국과 독일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정찰기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방에도 러시아에도 반대한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제국주의 전쟁 놀음을 중단하라

다음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3월 9일에 발표한 성명서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갈등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폴란드 IST 단체 '노동자민주주의'의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의 글을 웹사이트를 통해 전한 바 있다.

위장복을 입은 러시아 군인들이 크림 반도 거리에 나타나고 이에 서방과 새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위기에 내몰렸다.

미국도 이에 대응하며 전투기와 군인들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개입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1962년 10월 쿠바 해상봉쇄와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 등 자신의 '앞마당'에서 온갖 포악질을 저질렀다.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충돌에서 우리는 누구도 지지할 수 없다. 우리는 나토든 유럽연합이든 서방의 어느 국가라도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도 반대한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현 위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앞날을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바꾸려 한다. 러시아는 야누코비치를 후원해 왔고, 서방 정치인들은 마이단[우크라이나 키예프 소재 광장] 점거 운동에 직접 개입했다.

미국도 러시아도 전쟁을 벌이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갈등이 고조되면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진보적 제국주의는 없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이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체제를 말한다.

전쟁과 사회 불평등에 심각하게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방과 러시아 중 더 진보적으로 보이는 한 쪽을 지지하는 데로 이끌리고 있다. 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럽연합의 '현대화'라는 가면을 근거로 들고 있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옛 소련을 사회주의로 보는 사람들이다.

즉, 어떤 사람들은 서방만을 제국주의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러시아만을 제국주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견해에 모두 반대한다. 물론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국제주의적 구호는 현재 상황에도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 지배계급과 충돌을 벌이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에 진보적 색깔을 입혀서는 안 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전통을 지키는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서방도 러시아(소련)도 아니다" 하는 구호는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을 지키는 데 일조했다. 이 구호는 현재 상황에도 매우 적합하다.

두 종류의 민족주의

현재 크게 두 종류의 민족주의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두 민족주의는 각각 서방 열강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가장 강력한 반(反)러시아 민족주의는 그 뿌리가 깊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했지만 [그 뒤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했다. 소련 시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억압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억압 역사는 20세기 전반 우크라



우크라이나 노동계급의 두 적들.

미래를 위한 최상의 대안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모든 올리가르히에 맞서 항의 운동과 파업을 벌이고, 제국주의 전쟁 놀음을 지지하는 모든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나 독립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훨씬 더 오래됐다.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타타르족(크림반도 인구의 12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에 대한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타타르족은 1944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쫓겨났다. 그들이 대규모로 귀향하기 시작한 지 이제 몇십년 되지 않았다.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을 미화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다른 한편, 러시아어 사용자 수백만 명은 자신을 러시아인으로 여긴다. 야누코비치 퇴진 이후에 들어선 새 우크라이나 정부가 맨 먼저 한 일 하나는 러시아어를 공용어에서 제외시킨 것이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중적 항의의 시위가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우크라이나 깃발이, 동부에서는 러시아 깃발이 휘날리는 광경은, 두 민족주의의 위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노동자들도 동서로 분열돼 있음을 보여 준다.

푸틴은 반(反)파시즘 세력이 아니다

사회 변화를 바라고 민주주의 확장을 염원하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새 정부에 파시스트들이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보여 큰 충격을 받았다. 파시스트들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이단 점거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덕분이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좌파가 오랫동안 취약했고, 조직 좌파가 항의 운동 속에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

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야누코비치의 퇴진을 "파시스트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의 주장을 맹무새처럼 따라 하는 것이다. 야누코비치가 몰락한 진정한 이유는 대중적 항의 운동이 일어나고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지며 1백 명가량 사망하는 가운데 이전까지 그를 지지한 올리가르히[소련 붕괴 후 시장 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부와 함께 막대한 정치 권력을 누린 소집단]의 일부가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 파시스트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푸틴이 파시즘에 맞서 싸운다고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시각도 없다. 러시아 국내에서 푸틴은 극우 정치인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를 적극 활용하고 파시스트 단체들의 활동을 눈감아 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좌파가 취약한 가운데 진행돼 온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개입은 파시즘을 비롯해 온갖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서방은 우크라이나 새 정부를 지지하면서 거기에 파시스트가 섞여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서방 정치인들은 마이단 점거 운동에서 파시스트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연단에 설 태세가 돼 있었다.

노동자들을 향한 공격과 반격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은 자국 올리가르히들의 공격을 받아 생활수준이 떨어진 것에 이어, 이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하는 압력까지 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

합이 발표한 1백10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 방안은 우크라이나가 IMF와 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긴축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러시아도 [국영 천연가스 회사] 가스프롬을 통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할인해 주던 천연가스 가격을 4월 1일부터 올려 받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서부의 마이단 점거 운동과 동부의 친러시아 시위 모두에서 올리가르히의 지배에 반대하는 광범한 정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 때문에 노동자·빈민들은 올리가르히에 맞서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해 있다.

미래를 위한 최상의 대안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모든 올리가르히에 맞서 항의 운동과 파업을 벌이고, 제국주의 전쟁 놀음을 지지하는 모든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것이다. 마이단 운동이 보여준 야누코비치를 향한 분노는 빈곤과 긴축, 민영화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올리가르히, IMF-EU, 모스크바 모두 이를 우크라이나 민중에게 강요해 왔다.

지금 당장은 이런 전망이 요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원한 때문에 4백만 명도 안 되는 인구 중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보스니아*에서 최근에 노동계급이 그런 민족주의 분열을 적극적으로 뛰어넘어 투쟁을 벌인 것을 보면 그런 단결은 가능하다. 유럽의 좌파가 제국주의의 개입과 긴축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좌파가 대안으로 성장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다.

번역 김종환



보스니아 투쟁
1990년대 보스니아에서는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내전까지 있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실업자일 만큼 경제난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2월 "우리는 세 언어로 모두 배고프다", "민족주의 끝장내자", "해방이야말로 나의 조국"라고 외치는, 인종을 뛰어넘어 임금 인상, 재국유화, 무상의료 등을 요구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맑시즘2014

일시: 8월 7일(목) ~ 10일(일)
장소: 서울
주최: 노동자연대

※ 맑시즘은 14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인종차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반대한다

이정원

국제엠네스티가 박근혜 취임 1년에 맞춰 보낸 공식서한에서 말했듯이 “한국 사회 인권 전반이 하락”했고 이 기간 동안 가장 취약한 집단인 이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다. 이번 개악안은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핵심 내용은 출입국 공무원의 권한과 이주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미등록 체류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 있다는 제보나 ‘합리적 의심’만 있어도 출입국 공무원이 언제 어디든 맘대로 들어갈 수 있게 허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현행법’ 이므로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해 영장 발부 같은 법률적 제약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누가 ‘출입국 위반사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수색하고 체포할 권리를 출입국 공무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 자체는 절도와 강도 같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 단속반이 수색하기 위해 주로 쳐들어가는 곳이 다름 아닌 영세 제조업 공단, 건설현장, 농장 등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저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노동을 한 것이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는 것은 궤변이다.

게다가 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누가 이득을 봐 왔는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수출 산업의 가장 밑바닥 하청 공장에는 어김없이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가장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축산·어업 등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주민 대다수는 터무니없이 낮은 대가만을 받고 한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해 왔다.

그런데 왜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지며 희생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야 하는가?

편견

법무부가 이 개악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매년 벌어지는 ‘불법 단속’ 논란과 인권침해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최근 법원이 공장이나 식당 등에 출입국 단속반이 마구잡이로 침입하는 행위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개악을 추진하는 목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모두 색출해 추방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진정한 목적은 경제 위기 속에 실업과 복지 부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이주민을 속죄양 삼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지배자들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강화하는 진정한 배경이다.

또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를 막겠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국에 돌아간 뒤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을 개악했다. 정부가 나서 ‘합법적’ 임금 체불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국내 이주민들은 작업장에서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바로 정부가 인종차별의 주범인 것이다.

정부는 비교적 저항하기 어려운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치졸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주민이 ‘잠재적 범죄 집단’이라는 편견을 심고 노동자들 사이에 적대감을 부추겨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이런 시도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계급의 일부 2013년 12월 15일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결혼 이주민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철회하라

결혼 이주민 비자 심사 강화 조치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한국어 어능력시험 초급 1급)과 한국인 배우자의 연소득(소득이 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인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도 ‘정상화’ 운운하며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해 비자 발급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동안 결혼 이주민이 입국한 후해야 지원을 하다 보니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입국 전 단계에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비자 신청은 양국에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결혼 절차를 완료한 후에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를 받지 못하면 해당 여성은 결혼은 했으나 한국 입국이 막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주 여성 지원단체들은 이 조치가 결혼 비용을 높이고, 결혼중개업체의 비리만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규제 장벽이 높아지면 중개업자들이 더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결혼 이주 여성들

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마치 여성들의 책임인 양 떠넘기는 비열한 짓이다. 그러나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남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여성들이 학대나 폭력에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처지에 여성들을 묶어 둔 것이 진정한 문제다.

정부는 이 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 가족’을 유지할 때만 한국에 체류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의 진정성’ 운운하며 이런 끔찍한 억압을 유지해 온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

‘결혼 비자 심사 강화 제도 시행’을 알리는 법무부 보도자료는 “여성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맞선 과정에서] 통역은 가사를 돕는다고 함”이라고 쓰고 있다. 이주 여성이 한국에 오려고 사기성 결혼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덧씌운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의 소개, 혹은 스스로 배우자를 찾았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런 주장은 이주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고의적 비방이다.

실사 일부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려

고 결혼을 이용한다 해도, 이들을 비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이주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결혼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하는 고육지책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수백 년 동안 결혼은 이주의 한 방식이었다. 정부가 마치 결혼 이주가 신종 사기 행각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대는 것은 고약한 짓이다.

역차별?

정부는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고 국가와 사회가 정착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가 문제라며,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급증해 ‘국민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고 이간질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엄청나게 보조하는 듯 생색내지만 실상은 ‘역차별’ 운운할 정도의 퍼주기 지원 따위는 없다.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가 수급자여도 아내는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결혼 이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취업해 경제 활동을 하며 가계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나마 월평균 가구소득 2백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이 2009~12년에 17.8퍼센트 감소한 데는 이들이 노동을 해 소득을 올린 덕분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복지 예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은 지난해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삭감됐다. 이처럼 인색한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축소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그 책임을 결혼 이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의 위선적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2014년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한
정부의 인종차별 규탄 및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연대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20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올해도 전진한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

3월 5일부터 6일째 본관 점거농성과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벌인 경희대 청소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두며 투쟁을 마무리했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지난해 시급 5천 7백 원에서 6천2백 원으로 인상됐고, 식대 2만 원, 명절 상여금 1만 원이 인상됐다. 파업 기간의 임금도 보전받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약 10퍼센트가량 인상됐다. 비록 애초 요구인 시급 7천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총의 임금 인상 가이드 라인 2.3퍼센트에 견주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경희대학 당국이 먼저 나서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학 당국이 “진짜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사실, 누구나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당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도 용역업체는 “이 이상은 원청이 거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며 자기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걸 털어놓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총회에서 “이제는 직고용을 쟁취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1천6백 명

이번 경희대 청소 노동자 투쟁은 공공 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 소속 서울 지역 14개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의 일부였다.

14개 대학의 노동자 1천6백 명은 “우리가 손자 용돈 주려고 일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학교가 우리에게 주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에 김치만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절대 아프지 말라는 것과 같다” 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인권 침해 문제도 노동자들의 핵심 불만이었다. 한 주차 관리 노동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자리를 뺏 수 없어 강통에 소변 볼 정도”인 상황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리자는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마빡에 ‘노조’라고 써 있네” 하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2월 25일 경고 파업, 3월 3일 하루 동시 파업을 벌였다. 이후 매



“생활임금 보장하라” 청소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높은 임금 인상을 쟁취해 왔다. 3월 3일 14개 대학 하루 파업.

올해 처음으로 파업을 벌인 경희대 청소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거치면서 분회 조직력이 좋아졌다”, “파업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하고 말했다.

일 학내에서 투쟁 조끼를 입고 학생들에게 투쟁을 알리는 홍보전과 중식 집회를 열었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축소하자 20만 원가량의 임금 손실을 보게 된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은 3일부터 열흘간 본관 점거 농성과 파업을 벌였다. 경희대 노동자들은 “우리도 고려대처럼 싸우자”며 고려대 노동자들의 투쟁에 고무돼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서자, 학생들과 대학 직원들의 뜨거운 연대도 잇따랐다. 대학 당국들은 이번에도 “등록금을 동결해서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며 전형적 이간질을 시도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등록금 대폭 올릴 때 우리 임금 그렇게 올렸냐!”며 일침을 냈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하자마자 학생 단체 54곳이 공동 지지 성명을 냈다.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한 본관은 학생들과 연대 단체들의 지지 메시지와 대자보로 도배됐다. 이를 만에 고려대 학생들 4천5백 명이 청소 노동자 투쟁 지지 서명을 했다. 경희대 분회장의 말처럼 “학생과 노동자가 톱니바퀴 맞물리듯 [학교에 맞서] 같이 싸웠다.” 또, 경희대 대학노조 위원장은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집회에 연대하러 와서 “직고용돼 한 노조 안에서 함께 싸우자”고 말해 환호를 받았다.

이런 힘으로 ‘임금 동결’만 외치던 경희

대 당국을 무릎 꿇리자, 그동안 서로 눈치 보며 버티던 대학들도 하나둘 교섭에 나서기 시작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러나 여전히 경희대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있던 대학(카이스트, 한예종, 광운대, 서강대 등)과 고대병원들은 “우리는 5천7백 원 주던 사업장과 좀 다르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

또, 고려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 당국은 임금 타결과는 별도로 “이번엔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투쟁을 이끈 지부장에게 고소·고발 협박도 하며, 어떻게든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 보복하고 싶어 한다. 대학 당국과

3·8 여성노동자대회에서 드러난 여성 노동자의 현실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치도 나아지지 않았다. ‘106주년 3·8 여성노동자대회 공동기획단’이 주최한 ‘3·8 여성노동자대회’와 ‘시간제 일자리 문제점과 현실’ 토론회 및 증언대회(이하 증언대회)에서 발언한 여성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등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57.5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남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2퍼센트, 2013년 기준).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3.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통계상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화한 결과”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 형태 중에서 간접고용이나 단시간 근로가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내에서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남우



막나가는 여성 대통령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

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사용자들이 기간제 비정규직을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의 범망을 피해가려고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 노동자들도 ‘3·8 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임

신을 이유로 해고한 병원을 규탄했다. 보라매병원에서 수술실 비정규직 간호사로 일해 온 강제라 씨는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 기대했지만, 2년 재계약을 앞두고 1년 9개월 만에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해고됐을 때 그는 임신 14주차였다. 보라매병원 측은 강씨가 낮은 근무 평점을 받았으면서 해고

를 정당화하지만, 강 씨는 “평가에 참여한 동료가 [병원 측으로부터] 점수를 낮게 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이 시립 병원인데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인 또 다른 사업장인 다산플랜터의 노동자들에게도 규탄의 대상이 돼 왔다. ‘3·8 여성노동자대회’에서 김영아 서울본부 다산플랜터지부 지부장은 “그동안 노조의 직고용 요구를 회피해 왔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통역 상담사를 모두 해고하고 해당 서비스를 없애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들은 월 평균 임금이 65만 원밖에 안되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가 전

체의 66.3퍼센트다. 이런 시간제 일자리의 73퍼센트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증언대회에서 여러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더한층 쥐어짜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여성들에게 강요된 것이었음을 보여 줬다.

김진숙 서비스연맹 홉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은 홉플러스가 법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무를 시키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7.5시간 계약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이 8시간을 훌쩍 넘는 데도 말이다.

심지어 계산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4.5시간, 5.5시간, 6.5시간 계약을 강요했다. 이런 차별적 계약시간은 월 10만~20만 원 남짓의 월급 차로 이어져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홉플러스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30분 단위 계약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5, 6, 7 시간 계약을 강요

독자토론광장

ws@wspaper.org

3월 25일(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삼성에 맞선 저항’ 포럼 참가기

책에서 읽던 자본주의의 추악함을 느끼게 한 생생한 토론

2월 27일 노동자연대 경기지회가 주최한 포럼 주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삼성에 맞선 저항”이었다. 포럼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에게 어색했지만 일단 가서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다.

이종란·박성주 두 분이 강연을 해주셨다.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이 발암 물질이 가득한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또 이에 맞선 암에 걸린 노동자들의 투쟁도 상세히 소개해 주셨다. 강연을 듣는 내내 머릿속이 멍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게 진짜 현실 맞아?’라는 물음과 함께 내 기억 속 삼성 로고가 너무 뻔뻔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삼성이란 대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 이렇게 심할 줄이야! 삼성자본의 배를 불리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실상에 너무 화가 났다. 지금 내 손에 든 삼성 휴대폰을 보니 반도체 노동자의

설움과 죽음도 같이 들어 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박성주 부지회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서비스 센터 노동자들의 처우와 투쟁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반도체 노동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은 책에서 읽던 자본주의의 현실과 똑같았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돈만 되면 살인까지도 하는 것이 자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이것은 삼성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포럼 주제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삼성에 맞선 저항이 노동자 투쟁의 화석이 돼 꼭 승리하고, 이 투쟁이 삼성의 또 하나의 투쟁이 돼 착취받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고무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고 노동자다. 이런 비인간적인 자본에 맞서 꼭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김승현 기자ча 노동자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

삼성의 압박을 뚫고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기적”

“대한민국”이란 국가보다 세계적으로 더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감히 비판할 수 없는 “성역”으로 불리는 삼성의 권력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와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문제를 알린 반올림의 활동,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저항이 시작되면서다.

그런 가운데, 삼성 반도체 노동자 중 세계 최초로 산재 노동자로서 인정받은 고(故) 황윤미 씨의 기일인 3월 6일에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이 상영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삼성을 ‘진성’으로 바꿔 만든 픽션인 <또 하나의 약속>이 그랬던 것처럼 “삼성공화국”의 압박을 받았다. 이 다큐멘터리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옥랑문화상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삼성전자는 영화제 후원을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영화가 제작된 후에도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금이 이뤄졌다. 본인이 이 모금에 참가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영화 상영 자체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분노하고 저항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준다.

영화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비록 대학 졸업을 못했지만, 많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자부심”과 당장은 고될지라도 “돈 많이 벌어서, 대학 진학”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갖고 입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은 아무리 고된 일을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예쁜 방진모”를 쓰고 싶어 하는, 말 그대로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다. 이때만 해도 희망이 넘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쪽지와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을 담은 카메라를 통해서 비쳐지는 현실은 정말로 참혹하기 그지없다. 노동자들은 “상사의 구박”에 시달리고 “유해한 약품”들을 직접 만지며 점차 병에 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낡은 전자제품이 쓰레기장에 버려지듯이, 죽어간다. 다큐멘터리는 몇몇 대화 장면을 제외하고는 무음 처리를 해, 차가운 분위기



를 연출하면서 이런 싸늘한 분위기를 더 더욱 극대화했다.

민약에 산재로 고통을 겪는 삼성반도체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이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대부분 그렇듯 “안타까운 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명언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계란은 살아서 바위를 넘듯”이 황윤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가 거대 자본 삼성에 맞서면서 이 문제는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가 차근차근 여러 정보를 모으고, 뜻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든 노동자들과 가족들도 이 문제가 더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함께 동참하면서, 결국 “반올림”이란 모임이 꾸려지고, 이 모임은 삼성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할 정도로 커진다.

비록 다큐멘터리가 전반적으로 무음의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함에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힘이 난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각 지역 센터별로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도입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추천한다. 그리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탐욕의 제국> 배급위원회에 참가해서 무노조 삼성에 맞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연대했으면 한다.

김재원



대학 당국 : 공공의 적 청소 노동자 투쟁에서 학생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였다.

용역업체는 특히 올해 ‘해마다 임금 올려 달라고 떼쓰는 것을 참지 않겠다’ 하며 강경하게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려는 것과 관련 있다. 지배자들은 연초 청소 노동자들의 승리가 흑역사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까 봐 우려했을 것이다. 그간에도 3월의 청소 노동자 투쟁은 그해 임금 인상 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대학 당국 역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구조조정이나 등록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또, 그간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부러먹었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해 가파른 임금 인상을 쟁취해서 이제는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서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대학 당국의 양보 여지를 줄였을 것이다.

사측의 이런 강경함에도 분명 올해도 청소 노동자 투쟁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집단 교섭과 투쟁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상향평준화 하는 좋은 효과를 내 왔다. 여러 대학이 동시에 접거 파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집단 교섭·투쟁의 효과를 더 높인다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대학에 더 큰 압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 사례처럼 해당 대학 직원 노조의 연대도 큰 힘이 된다.

올해 처음으로 파업을 벌인 경희대 청소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거치면서 분회 조직력이 좋아졌다”, “파업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내 마음이 불화로처럼 뜨겁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이처럼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을 성장시켜, 대학 간 불균등을 극복하고,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데도 좋은 구실을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계속 대학이 강경하게 버티면 2단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14개 대학의 노동자들이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때까지 연대와 지지를 이어 가자.

성지현

하고 있어, 8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문제는 여전하다. 김 본부장은 “마트 노동자의 대다수는 40~50대 생계형 노동자들”이라면서 “시간제 일자리는 그야말로 일한 시간만큼 월급이 나오는 것인데, 어떤 생계형 노동자가 짧게 일하고 적은 월급을 받길 원하겠느냐” 하고 말했다.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초등 돌봄교실 전담교사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을 강요당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간 쪼개기, 요일 쪼개기, 이중 계약 등 편법적 계약 형태”가 난무했다.

돌봄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자 학교 측은 “실업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했다. 학교와 3~12월만 계약해서 1, 2월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이 무기계약 전환을 막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심지어 학교 측은 “돌봄 교사 일은 무료 봉사로

생각해야지 직장으로 생각하지 말라” 라면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었다.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서 강의를 하는 예술 강사들도 비슷한 처지다. 예술 강사들은 한 시간을 수업하려면 준비를 하고 수업 후에는 수업일지를 작성해 그것을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데도, 수업 준비와 마무리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 시간치 수당만 받고 있다. 예술 강사들도 “주당 15시간 미만만 수업하라는 부당한 근로지침”을 강요당했다.

이마저도 1, 2월에는 수입이 없어서 사실상 실업 상태가 되는데, 얼마 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에서 사망한 직원도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참사를 당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경력 단절 해결” 운운하며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것은 육아와 가장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뿐이다. 진정으로 이런 문

제를 해결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육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여러 여성 노동자들이 증언하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일할 수만 있다면 정규직의 안정적 일자리를 원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은 결국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운동이 시간제 일자리 보안을 넘어 도입 자체를 유보 없이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남성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 정책, 보육 책임 여성 전가로 여성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할 뿐 아니라, 조직 노동계급이 고유의 강력한 잠재력을 발휘해 여성 차별 반대 투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현주



이런 사회적 연대 투쟁의 바탕에 생산 지점에서 벌이는 투쟁과 결합된 노동자 연대가 있어야 한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자 연대는 가능하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저항과 연대의 정서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은 노동자 운동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새삼 환기시켰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에는 민주노총이 수년 만에 하루 파업을 했다. 반값제도, 노동자 투쟁이 소생하면서 ‘노동의 주도력’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분화로 노동자 연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만만찮다. 특히, 1997~98년 금융 공황을 계기로 노동계급이 양극화하고 노동자들의 파편화·원자화도 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해 투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쪽 진실과 과장

노동계급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구분이 있다. 이런 구분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이다. IMF 금융 공황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이런 구분을 더 심화시켰다.

이런 차이에 주목해 심지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결론으로까지 나아가는 주장들을 노동자 운동 안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다.

비정규직이 임금과 노동조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정규직보다 크게 열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둘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대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포기해야만 — 이는 오직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강요로써만 가능하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현상적 격차 못지 않게 단일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봐야 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증가로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노동조건을 후퇴를 압박받는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투쟁력도 크게 떨어진다.

철도 노동자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철도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한 것도, 전교조 교사들이 시간제 교사제의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비정규직이 투쟁할 때 정규직 노동조합과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가끔 있다. 2010년과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갈등이 빚어진 핵심 이유는 원청 노동조합 지도부가 연대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미덥지 못한 중재자 구실을 앞세웠기 때문이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중재자인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개혁주의가 본질적 문제였던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싸잡아서는 곤란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에 포섭됐다는 생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부적절한 특근 합의에 반발해 특근 거부 투쟁을 했을 때, 거의 모든 좌파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기를 꺼렸다.

사회적 연대

그들의 대다수는 노동자 연대 대신에 사회적 연대를 대안으로 내놓는다. 물론 사회적 연대는 좋은 것이다. 가령,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지난해 연말 대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은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운동이었다.

또, 거리 항의 운동이 때로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2008년 촛불항쟁은 막 등장한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지난해 터키와 브라질에서도 청년들의 거리 항의가 그 나라 정부들을 강타했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로 노동자 연대를 대체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가령 “국가 권력의 비정상적인 자본 편들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들과 맞잡은 각 계각층의 사회적 연대에서 나온다”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탑승자 일부의 주장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그저 다원주의를 칭송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중심(이윤이다)과, 따라서 반자본주의적 운동의 중심(노동자 파업과 시위)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잘 조직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을 때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봐야 한다. 또, 2008년 촛불항쟁이 절정기에 1백만 명을 거리로 끌어냈을 때조차 노동계급의 계급 고유 행동의 부재로 말미암아 더 전진하지 못하고 적들의 반격을 당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다원적 사회 계급들의 거리 항의가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거리 항의 운동의 동력이 노동계급의 경제적 힘 사용에 바탕을 두지 않고, 따라서 그 운동이 지배계급 권력의 핵심인 이윤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급이 아닌 다른 피지배 집단의 고통을 도외시키는 노동자주의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차별에 맞서는 투쟁과 착취에 맞서는 투쟁이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착취에 저항하는 능력을 차별을 반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가장 강조한다. “사회적 연대는 사회민주주의의 영혼이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적 연대는 거리 항의를 가장 강조하는 부분적 아니기즘이나 부분적 자율주의와 달리 산별 교섭과 의회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적 연대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분할 지배 전략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이 극심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앙집중적 산별 단체교섭과 입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본다. 산별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양날개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즉 정당은 제도권 정치를, 노동조

합은 경제 투쟁을 맡는 역할분담론이다.

물론 산별노조는 조직 형태상 더 큰 범위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립한 자신들의 정당을 갖는 것은 분명히 진보다.

그러나 산별노조가 자동으로 기업별 울타리를 뛰어넘는 계급적 연대와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열 해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조직 형태가 자동으로 계급적 연대라는 정치적 내용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적 연대의 중요한 모델 중 하나가 스웨덴의 ‘연대임금 전략’이다 (‘벤-마이드너 모델’). 이 모델은 무엇보다 임금 수준을 중앙에서 결정하는 ‘임금 연대전략’이었다.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의 3D 업종에서 자본가들을 제약하는 이점이 있었다. 반면, 자본가들에게는 가장 수익성 있는 기업의 임금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자본가들에게는 높은 수익성을, 노동계급에게는 실질적인 빵조각을 제공하는 식으로 자본가 계급과 협상했다.

그러나 연대임금 전략은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 격차를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 무엇보다, 계급 타협이 지속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투쟁의 근육이 풀어졌다. 마침내 1990년대 중엽 스웨덴 자본주의가 위기를 겪고 지배자들이 신자유주의 공격을 가할 때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기가 어렵게 됐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중앙 교섭이라는 조직 형태 자체보다는 계급세력의 균형과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삶과 조건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계급투쟁

거리 항의와 공식 정치를 통한 ‘사회적 연대’에 대해 종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지만, 생산 지점에서 벌이는 투쟁과 결합된 노동자 연대가 그런 투쟁 형태의 바탕이 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이 보여 주듯이,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력이 소생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의 계급세력균형이 노동자·민중 편에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 가령 남재준의 위기 등 여권 내 분열을 계급투쟁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건도 마찬가지다. 강력하고 잘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면, 나머지 노동계급도 고임금을 받는 강력한 부문의 노동자들과 자기 임금을 비교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한 부문의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속도는 다른 부문의 에스컬레이터 속도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세력이 증대하면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이다. 반대로, 강력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억제된다면 취약한 노동자들은 심지어 임금 삭감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노동자 연대는 한 작업장 노동자 투쟁에 대해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걸고라도) 동시에 파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급 대 계급의 투쟁”으로 발전하면 그러면 정치 투쟁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요구의 정치적 여부보다는 단일한 계급으로, 또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나기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노동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하고, 구체적인 정치 상황과 계급세력 균형에 따라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가 오르내릴 수 있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흔히 자기제한적으로 투쟁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노동자 연대가 언제나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문적 투쟁(경제 투쟁)이 계급 전체의 운동(정치 투쟁)으로 언제나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선진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어야 한다. 이런 선진적 노동자들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작업장과 거리 모두에서 애써야 한다.

어찌 보면 (사회주의) 정치란 간단한 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나머지 노동자들을 자기 의견 주위로 결집시켜 계급적 행동과 비전, 지향성을 현실화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서평 |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투쟁》



국제 노동운동의 교훈에서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부침을 돌아보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화성공장 조합원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시종일관 한국사회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생각했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동료 노동자의 징집에 맞서 비공인 파업을 벌인 영국 세필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한 대목에서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방위산업체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고(해고되면 곧바로 군대에 끌려가야 했다)된 동료를 복직시키라며 투쟁을 벌인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영국의 직장위원회 운동에 관한 대목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공식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과 직권조인(위원장의 날치기 합의)에 맞서 즉각적으로 비상파업대책위를 구성하고 비공인 파업을 벌인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가 떠오른다. 1990년대 초반까지 춘투 기간에 집행부를 갈아치운 경향이 있는 사업장이 65퍼센트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1987년 7~9월 대투쟁과 1989~90년 당시 노동자들의 전투성과 창의력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다. 지게차와 중장비는 물론이고 경찰 침탈에 맞서 탱크를 몰고 나온 군수업체 노동자들도 있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샌딩기’(배의 녹을 벗겨내려고 고압력으로 모래를 분사하는 중장비로, 이 모래에 맞으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를 몰고 나와 경찰력과 맞섰다. 파업하면 곧 공장 점거와 거리 시위, 경찰 투입이 일상이던 시기였다.

이런 투쟁을 거치며 각 지역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들의 협의체와 연합체를 건설하고 1990년 1월 마침내 전국노동조합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을 건설해 냈다. 이런 전투성과 민주성은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압력과 동시에 혁명가들이 조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 운동이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좌파 지도부 세우기

이 책은 노동조합 역사가 1백50년 넘는 영국과 최초의 노동자 혁명이 성공한 러시아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런 물음에 대답한다. 특히,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탁월한 분석과 현장조합원 운동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조직노동자 운동이 지금 겪고 있는 질곡과 위기를 ‘노동귀족’, ‘철밥통’, ‘배부른 자들의 투쟁’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노동귀족’론은 이미 1백 년 전에 등장했다. 레닌이 서구 노동자 운동이 혁명적으로 분출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 ‘노동귀족론’을 제기했다.

물론 레닌이 제기한 ‘노동귀족론’이 지금처럼 천박한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레닌의 분석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었다. 노동운동 상층의 일부만이 문제라면 그들을 혁명적인 세력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분석과 경향은 ‘좌파 지도부 세우기’ 전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이미 1백 년 전 영국에서 혁명가들은 ‘좌파 지도부 세우기’와 ‘아래로부터 압력’으로 일상기에 노조를 혁명적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을 추구했지만 이들은 참담한 결과에 직면했다. 일상적 시기에 ‘혁명가들이 노동조합을 장악하라’는 구호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영국 공산당의 윌리 갤러거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우리 동지들은 노동조합 지도부로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언제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투쟁

토니 클리프, 도니 글로스타인 공저

이승민 역 | 책갈피 | 176쪽

8,000원

나 ... 우리 동지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형 노동조합의 지도부에 여러 차례 당선했지만 우리는 이런 활동이 혁명과 공산주의 운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현장과 경향이 지속적으로 추구한 좌파 지도부 세우기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은 많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1998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노사정 합의한 것에 반발한 현장파의 지지로 당선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을 철회하며 정리하고 철회 투쟁을 회피했다. 2002년 4월, 현재 좌파노동자회 소속인 허영구 당시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발전노조파업 연대를 위해 총파업을 선언해 놓고 당일 취소했다.

현대차노조 이상욱 집행부의 무쟁의 행보와 윤해모 집행부의 쌍용차 파업 연대 회피와 사퇴,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의 무쟁의 등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계급 대리전 성격을 띠었던 철도 파업에서도 노동조합 관료주의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박근혜와 지배계급은 온힘을 다해(하루에 총리, 국토부, 안행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과 검찰장장, 경찰청장 등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하며 협박했다) 철도 파업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지도부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려는 시도를 시종일관 회피했다. 민주노총에 경찰이 투입된 이후에도 김명환 위원장은 전면파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신승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전투적 언사를 했지만 실질적인 파업을 2월 25일로 늦추며 파업 동력을 쇠진시켰다.

노조 관료주의

이런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의 불필요한 타협과 응두사미, 뒷걸음치기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왜 이런 문제가 노조 관료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관료들이 처해 있는 위치와 조건에서 비롯하는지를 탁월하게 분석한다.

“노동조합은 착취 제도 자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착취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의 지도부적인 “노조관료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립하는 양대 계급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 한다.” “관료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니다.” “아누스의 신처럼 두 얼굴을 가졌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노조 관료층의 최대 목표는 바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자 물질적 토대인 노동조합의 조직 보전에 있다는 점을 차분히 논증한다.

이 책에서는 ‘현장조합원 운동 건설’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유형의 현장조합원 운동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본다. 1915년 영국의 금속 노동자들이 조직한 직장위원회와 탄광 지역의 노동자들이 ‘법좌파 연합’ 형태로 구성된 비공식개혁위원회가 있었다. 이 두 운동은 모두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집단행동을 고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과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두 운동은 공통적인 약점도 있었다.

금속산업의 직장위원회 투쟁은 특히 대단했다. 1916년 11월 세필드노동자위원회는 강제 징집된 젊은 동료 노동자의 복귀를 요구하며 숙련 노동자 1만 명이 작업장을 이탈해 파업을 단행했고, 파업 사흘째 되던 날 정부는 항복했다. 1916년은 제1차세계대전의 한복판인 시기였다. 만약 장차 한국에서 강제 징집된 노동자들을 방어하려고 금속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직장위원회가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 투쟁을 지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금속산업의 직장위원회의 경우 “사용자들의 편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조합원들과 나란히 노동했고, 조합원들이 느끼는 압력과 고스란히 함께 경험했다.” “대표자들은 노조 관료와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않으면 소환될 수 있었고 활동비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직장위원회의 목적은 아래로부터 노조 관료를 통제하려는 시도도 아니었고, 순수한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 이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한 지도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곧바로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얼마나 간단하면서 명료한 태도인가! 1백 년이 지난 한국에서도 이런 태도는 노조 관료에 맞서는 훌륭한 지침이 된다.

반면 광원들의 비공식개혁위원회는 “노동조합을 개혁하는 데 전념했다.” “물론 현장조합원의 대중적 압력을 최대한 반영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 기구를 개혁하는 것이었

다.” “이런 방식은 투사들이 노동조합 상층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비공식개혁위원회는 젊은 세대 활동가와 노동조합 관료기구에 편입된 활동가 사이의 끊임없는 마찰로 얼룩져 있었다.” 또한 “인간이 호홉하듯이 투쟁이 부침을 겪을 때마다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 같은 지적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좌파 노조 지도부 세우기에 전념한 오늘날의 한국에서 노동조합 운동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는 현장파 활동가들을 연상시킨다.

혁명적 정당

이 두 운동은 놀라운 장점과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취약했고, 조직을 느슨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산업에 간혀 협소한 시각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 약점마저 꼭 닮았다.” 단적으로 이 두 운동은 “같은 시기에 활동했지만 한 번도 공동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혁명적 정당의 지도와 개입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두 운동 모두 민감한 정치 문제를 배제하는 약점으로 인해 혁명적 정당의 개입이 어려웠다.

이 책을 보면서 한국 노동조합 운동이 겪은 부침을 비교해 보며 대안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장조합원 운동은 원칙적으로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속한 작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행동을 고무하고 조직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지향점을 갖고 작은 실천이라도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시작하면 된다. 그 과정에 노조 관료주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노동자 투사들과 혁명가들이 만날 것이다. 물론 현장조합원 운동이 원칙을 넘어 전략으로 현실화하는 건 노동계급 운동의 전반적인 고양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지금 노동자 운동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투사들과 노조 관료주의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쟁적 현장 노동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현장조합원 운동의 좋은 사례인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 1919년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의 파업 사진.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것인가?

이정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최근 중국 경제에서 드러난 몇 가지 조짐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알리는 징후이지 않을까 우려해 전 세계 지배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 경제에서 벌어진 일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태양전지 제조업체(상하이 차오리솔라)의 회사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됐다.

★ 2014년 2월의 수출이 전년도 2월에 견줘 18.1퍼센트나 하락해 무역적자가 2백30억 달러 발생했다.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0.2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포함한 고정자산투자가 이미 2013년 9월부터 둔화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 산업생산이 지난해 11월부터, 소매판매가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하자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와 철광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의 근거로 부동산 거품 붕괴,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파산 위기 등을 꼽아 왔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속담처럼 혹시 최근의 사태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호는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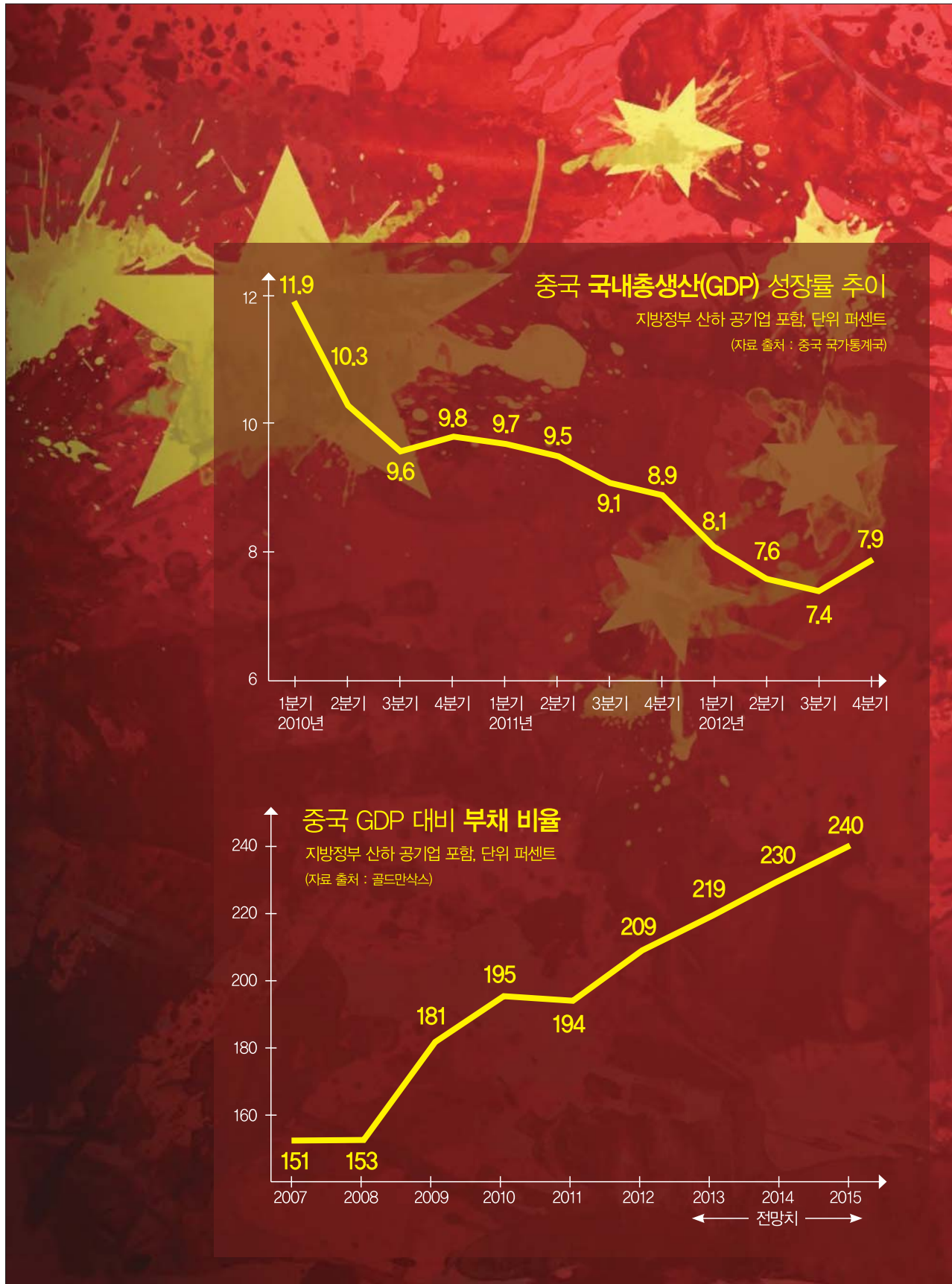
부동산 거품

오늘날 중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로존 경제가 불황에 처하면서, 수출 주도의 성장을 구가했던 중국 경제도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2008년 경제성장의 급락을 막아 준 것은 4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국유 상업은행을 통한 ‘문지마 대출’이었다. 이런 경기부양책 덕분에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됐지만, 과잉생산과 자산거품을 만들어 냈다.

2007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한 번도 실망을 안겨 주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황금 거위였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미국의 양적완화로 값싼 자금이 중국에 흘러넘쳤지만 수익성 있는 투자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데는 거래세로 세수를 벌충하는 지방정부도 한 몫을 했다.

그런데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시작됐거나 시작되기 임박직전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같은 1선 도시들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3·4선 도시들은 건물 입주율이 낮아 유명도시로 변모하고, 심예 은행처럼 부동산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이 축소되고, 중화권 최대 부자인 리자청이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의 사실들이 증거로 제시됐다. 1929년 대공황 전에도 플로리다 부동산 거품이 있었고, 1990년대의 장기불황 전에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있었고, 이번 세계경제 위기 전에도 미국과 유로존에서 부동산 거품이 있었다. 중국판 부동산 불패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거품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이면에는 과잉투자자와 수익성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생산 영역이 존재한다. 철강산업은 연



간 10억 톤을 생산할 설비를 갖고 있지만 철강 수요는 7억~8억 톤에 불과해, 과잉설비가 30퍼센트나 된다. 태양전지 산업은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급성장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가동률이 50퍼센트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 외에도 자동차, 시멘트, 선박 등의 분야도 과잉설비와 수익성 하락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설비투자 과잉과 수익성 하락은 기업의 부채를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중국 기업의 부채 규모를 12조 1천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또, JP모건은 중국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며,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92퍼센트에서 2012년 1백24퍼센트로 5년 동안 30퍼센트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채 증가와 과잉설비로 인한 수익성 하락 그리고 신용팽창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결합되면서 최근 중국의 실

질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더 많은 기업들을 디폴트 위기로 내몰 것이다. 최근 일부 신탁회사에서 판매한 투자상품 증권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파산으로 휴지조각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추정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46조 위안인데, 그중 23퍼센트 정도를 신탁회사가 운용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석탄, 철강, 태양광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실물 부문에서의 과잉투자가 투자기업 몰락과, 신탁회사가 판매한 투자상품의 디폴트로 이어지고 있다.

자금 검색

중국 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는 2013년 6월과 12월에 은행 간 단기금리가 폭등하면서 조짐이 보였다. 그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긴급 자금 3천억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검색을 일시 누그러뜨렸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이런 자금 검색 현상이 계절적 요인과 시중은행 예탁금의 일시적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이체 방크는 “중국이 1998년 러시아 디폴트 당시에 유사한 재정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자금 검색은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금리는 상승한다. 또한 금리 상승은 더 많은 기업들을 디폴트 위기로 내몰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그로 인한 디폴트 위기는 기업에 대출을 해 준 그림자 금융과 은행들의 위기로 전염된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이와 똑같은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그 당시 국유 상업은행들은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준비은행으로 바뀌었고, 금융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정상화됐다.

물론 최근에 두 번의 단기금리 급등이 나타났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곧장 위기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또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13년 은행의 불량 대출률이 1퍼센트에 지나지 않았고 은행업의 이익 증가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부문의 실제 흐름과는 동떨어진 진단일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은행업의 이익 증가율은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주된 이유는 악성 부채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과 기업 대출이 지금으로서는 회수 가능한 대출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악성 부채로 돌변할 수 있다.

단기금리의 급등처럼 불안감을 보이는 금융시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미 많은 자금이 풀린 상황에서 시장에 자금을 더 공급한다면 자산 거품을 더 키울 수 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투자의 확대가 아니라 값싼 자금의 증대와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림자 금융을 억제하는 정책은 더 많은 기업들을 디폴트로 내몰면서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다.

부채 리스크

중국 경제 위기의 뇌관 중 하나로 자주 지목되곤 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다. 2013년 중국 심계서(한국의 감사원에 해당)가 발표한 지방정부의 부채는 15조 위안에서 18조 위안으로 중국 GDP의 30~35퍼센트 수준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GDP의 60퍼센트 수준에 이른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 수준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작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또한 기업 대출 부실로 인한 국유 상업은행들의 잠재적 부실까지 고려하면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결코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

얼마 전 메릴린치가 발표한 보고서 ‘중국의 신용위험’은 향후 12~18개월 내에 중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메릴린치 중국법인 투자전략가인 데이비드 추이는 “금융 위기의 가장 확실한 선행지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5년간 1백20퍼센트에서 2백 퍼센트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중점실험실 류위후이 연구원도 중국 비금융부문의 부채가 GDP의 2.2배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부부문 부채는 GDP의 60퍼센트가 넘고, 기업 부채는 GDP의 1백20퍼센트를 넘었고, 정부와 비금융 기업 그리고 가계의 전체 부채는 GDP의 2백퍼센트가 넘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해 많은 자금을 경제에 쏟아부었고, 그 덕분에 실물 부문에 비해 신용이 크게 증대했다.

부동산 거품이 계속 확대될 수 없다는 점 말고도 비금융 부문의 기업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공기업의 이윤 창출 능력은 5~6퍼센트로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기업의 부채는 두 배나 되기 때문에 서방 기업과 비교한 중국 기업의 실제 부채 부담은 3~4배나 된다.

중국은 3조 8천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고 세계 제1의 무역 대국이니 만큼 금융 위기나 경착륙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자주 제기된다. 또, 중국 경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으니 이로 인해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묘한 논리도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경제가 당장에 경착륙하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데도 새로 출범한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취할 수 있는 대책들은 별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의 문제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실패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

은행과 달리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자본이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사모하는 것. 부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그림자’라는 말을 쓴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과 이를 둘러싼 지정학

김정일이 집권한 후, 북한은 지난해에만 13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 국내의 자원과 자본만으로는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시도가 1980년대 초 중국의 경제 개방에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진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밝지 않다.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은 대외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데, 지금의 대외 환경이 북한에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주로 중국과의 대외 무역에 기대어 필요한 자금을 얻으려 한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을 제외하면,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은 무려 90퍼센트에 이를 정도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들은 대부분 중국 자본의 유치를 겨냥하고 있다. “13개 경제개발구와 새로운 경제특구들이 대부분 북쪽과 중국의 접경지역이나 해안지역에 몰려 있다. 반면 남쪽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 옆에 위치한 개성 첨단기술개발구가 거의 유일하다.”(〈한겨레〉, 2014년 2월 19일)

이것은 북한 정권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바는 아니다. 사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 일본 등 서방과 관계를 개선해, 국제 금융기구들로부터 경제 회복에 필요한 차관을 들어오기를 열망했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이 자신과 좀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왔다.”(미국 국제정책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셀리그 해리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북한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거듭 좌절했다.

미국 지배자들에게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북한 ‘위협’을 과장해 그것을 빌미로 중국을 겨냥한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배치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북한 위협의 관리자로서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을 미국 패권 질서에 묶어 놓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도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는 태도다.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진보일 수 없다.

최근 오바마 정부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전략을 추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남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촉구할 때도 북한 ‘위협’론은 꽤 유용한 카드다.

미국 지배자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주요 교역 파트너는 중국과 남한이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

중국은 주로 지정학적 이유로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중국은 북한 붕괴가 낳을 혼란과 난민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사적 완충지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지탱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또한 중국이 투자한 라선(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중국이 동해안(그리고 태평양)으로 나아가길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한테 상당한 지정학적 이점을 준다.

남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남한 지배자들은 자유주의자이든 보수주의자이든 모두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지난 4~5년 동안 벌어진 북중 관계의 변화에 관해

서는 내심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남한 지배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남한은 중국의 변방국으로” 남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한 지배자들은 한반도가 분단돼 남한이 마치 대륙과 단절된 ‘섬’처럼 남아 있는 게 불만이었다. 이것이 남한 국가의 성장에 제약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시장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북한의 대남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물론 이것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중장기적 구상과 맞닿아 있으며, 이 점에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에 근본적 차이는 없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을 단지 지방선거용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엇갈리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주로 봐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박근혜가 “부산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후, 남한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험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를 허용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철도 부설이다.

그러나 미국의 하위 동맹인 남한은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이 설정한 틀을 넘어 남북 관계나 경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어렵다.

지난 2월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와 국제화를 추진한다면 미국과 의견이 충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지정학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최근 남북관계의 냉탕과 온탕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 아래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중단했고, 박근혜 정부도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 한때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됐다.

박근혜는 북한 비핵화를 경제협력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남북 경제협

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여기에 남북 지배자들 간에 불신과 상호 적대도 상당하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 이의 영향을 받아 남북관계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갈 가능성이 크다.

냉탕과 온탕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발견”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 전문가이자 〈한겨레〉 칼럼니스트인 존 페퍼는 이렇게 주장했다.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운송로와 에너지 파이프라인망을 확장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는다면 … 여기서 북한이 핵심적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는 1970년대 닉슨이 소련을 견제하고자 중국에 접근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균형잡기 전략”을 위해 오바마가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항상 더 나은 거래를 찾고 있[으므로] …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고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는 기회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 전략의 이익에 북한 정권이 부합하는 것이 남북한 노동자들에게 진보일 리는 없다. 설사 남북관계가 진전돼 남북을 잇는 철도가 놓이고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에 남한 자본이 적극 뛰어들다고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시장으로 ‘옆으로 개접을 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한반도가 불안정한 까닭은 앞서 살펴봤듯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이 제국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따라서 시장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밀착하거나 심지어 북미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은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자본주의 시장 개혁이나 국가 간 외교 정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이 제국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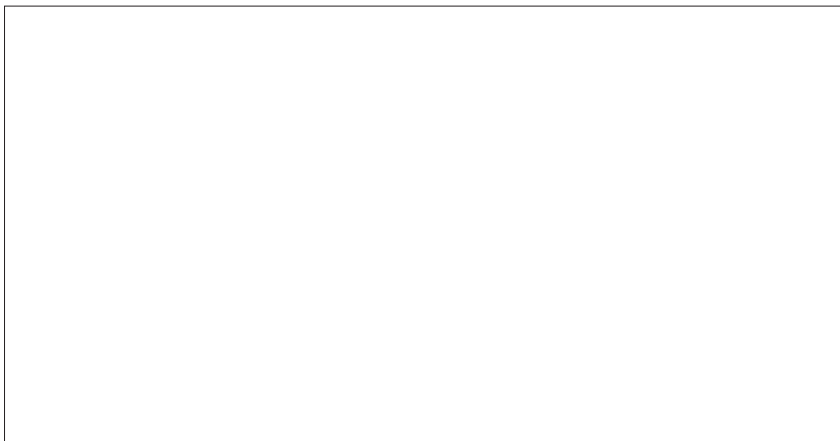
김영익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김상곤 전 교육감(이하 직책 생략)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통합신당 창당에 함께할 뜻을 밝혀 교사,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허탈함과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현신적 지원 덕분에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교육감에 당선할 수 있었다.

당선 후에 김상곤은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편에 선 대표적 진보교육감이었다. 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그는 무상급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국선언과 진보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 방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혁신학교, 학교폭력 이력 생기부 기재 거부 등 진보적 정책을 펴 왔다.



부르주아 기성 정당 속에서 진보적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덕분에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온 보수교육감에 맞서 많은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이 ‘제2의 김상곤’을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김상곤은 무상급식 정책을 사제로 들며 “도지사가 되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상곤의 ‘대표’ 정책

인 무상급식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많은 전교조 교사, 진보정당,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운동을 벌여 온 것이 대중의 복지 열망과 만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 자체가 그런 운동의 결과였고 다른 진보적 정책들도 마찬가지였다.

후퇴

그는 무소속 진보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야당들이 자신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대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리그에 출마하는 것도 승산이 작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통합신당 내 리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그러나 통합신당은 (전통적 대자본이

다수는 아닐지라도) 주요 계급 기반이 자본가인 부르주아 기성 정당이다. 김상곤의 통합신당 행은 그동안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락가락, 불철저함, 배신을 일삼아 왔고, ‘반재누리 비민주당 흐름’에 편승해 일부 수혜를 얻은 안철수의 ‘생각’도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세력들이 합당해 만든 통합신당에서 김상곤은 자본가들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사실, 김상곤은 이미 일제고사 등 경쟁 교육,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치원 교사들의 노동조건 문제, 교원평가 등에서 일부 후퇴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인숙

